

[표지]

모두가 꿈꾸는 미래! 지속가능한 전라북도

2023년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목차]

|   |     |
|---|-----|
| 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 002 |
| 04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     |
| 0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     |
| 11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     |
| 22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     |
| II.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026 |
| 28 소개                                     |     |
| 30 주요 연혁                                  |     |
| 32 주요 수상내역                                |     |
| III.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          | 034 |
| 36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소개                       |     |
| 40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     |
| IV. 시범지표 모니터링 결과 .....                    | 048 |
| 51 J-SDGs 2-2-2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     |
| 59 J-SDGs 3-4-1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     |
| 67 J-SDGs 5-1-1 지역 성평등 지수                 |     |
| 81 J-SDGs 8-3-1 청년 창업 건수 및 폐업률            |     |
| 97 J-SDGs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     |
| 108 J-SDGs 15-4-1 전라북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     |
| V. 함께한 사람들 .....                          | 124 |
| 126 2020년~2023년 활동사진                      |     |
| 153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 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의미

-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될 때, 인디라 간디 당시 인도 수상이 ‘가난이 최악의 오염’이라는 연설을 하면서 환경과 경제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진행되었다.
- 이후 1983년 유엔총회는 ‘2000년 이후 환경에 관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 on the Environment for the Year 2000 and Beyond)’를 구성하였고, 당시 노르웨이 수상 그로 할렘 브룬트란 트(Gro Harlem Brundtland)가 의장을 맡아 1984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 Development)로 이름을 바꿔 연구를 수행했다.
- WCED의 연구 결과물이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의장의 이름을 따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부름)로 발표되었고,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확립했다.
-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
- 이를 위해 그간 경제, 사회, 환경 각 부문이 따로 고려되어 왔던 것을 경제발전, 사회 통합, 환경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이후 환경이 지탱하는 선에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포용적인 사회 안에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동심원 모델’로 정립·발전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 Our Common Future (UN Brundtland Report, 1987) -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지속가능발전은 생태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공간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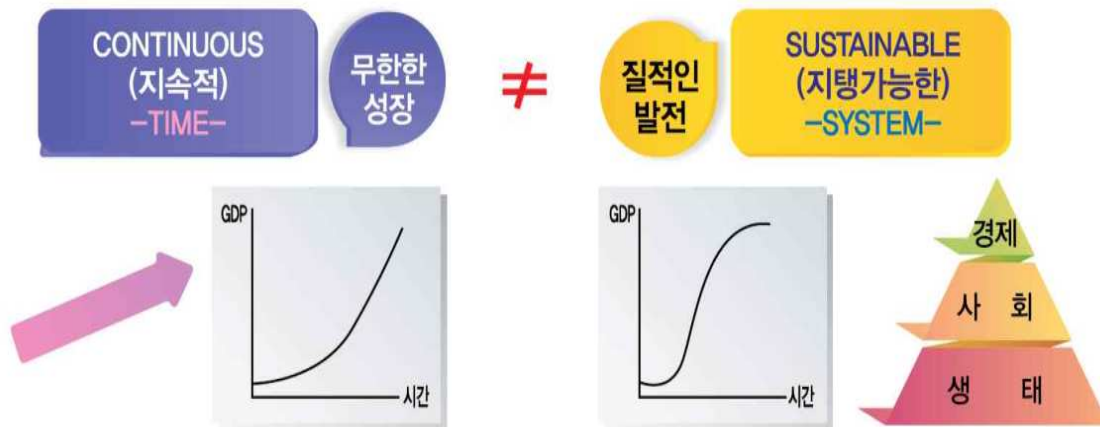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환경과 경제의 양립 가능성을 모색하며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 정립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 회의 (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국가 단위의 ‘의제21(Agenda 21)’ 작성, 지방 단위의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 작성, 그리고 그 이행을 위한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이어졌다.
- 2012년 리우+20회의에서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을 모색하기로 하면서 2015년 유엔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17개 목표로 구성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었다.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 ‘지속가능’발전과 ‘지속적’발전 의미의 차이

- ‘지속가능발전’과 ‘지속적 발전’은 본질이 전혀 다른 개념이다.
-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시간적 지속가능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관점에서 생태계가 인간의 사회체계와 경제활동 체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능력 범위의 의미를 담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은 발전을 지속시킨다는 무한 성장의 의미가 아니라 환경이 사회와 경제를 부양하고 지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류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 특히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가 어느 한 영역에서의 처방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통합적인 관점을 확보해야 하며, 문제 중심의 사고와 문제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것이다.



자료: 김병완 외, 2019,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거버넌스형 문제해결」, 35쪽 수정보완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

- 2015년 9월 채택된 유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합의문인 「Transforming Our World」 서문에서는 “이 의제는 사람,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좀 더 많은 자유가 있는 보편적인 평화를 강화하고자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 유엔 SDGs 2030은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다. 169개 세부목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3개국이 모두 참여한 것이라 17개 목표별로 각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세부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다.
- SDGs의 목표연도인 2016부터 2030년까지 각국은 매년 7월 유엔총회에 SDGs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4년에 한 번씩은 각국 정상회담을 통해 이행체계를 점검하기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230여 개의 평가 지표(Indicators)가 마련되어 있다.

### 우리 세계의 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가지 목표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 2015년 채택한 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소위 5개 축(5Ps)을 바탕으로 정립된 것이다. 사람, 지구, 번영 축은 사회발전, 경제 개발, 환경보호를 위한 목표이고, 평화와 파트너십 축은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과 방법을 의미한다.
  - 첫째, 사람 축은 모든 인류가 존엄성과 평등 속에서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수 있도록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킨다.
  - 둘째, 지구 축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행동을 비롯하여 지구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번영 축은 모든 인류가 번창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진보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 넷째, 평화 축은 근심과 폭력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한다.
  - 다섯째, 파트너십 축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두면서 모든 국가, 모든 이해당사자, 모든 사람들의 참여로 강화된 지구적 연대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부흥시킴으로써 이 의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수단들을 동원한다.



## UN SDGs 세부목표들 간의 연계성(Nexus)

- UN은 SDGs의 1번 목표부터 17번 목표까지 각 목표별 세부목표의 연계가 어떻게 직접·간접적으로 연계되는지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각 목표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부서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17개 목표체계를 활용하여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등 활용법이 중요하다.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립한다면 광역과 기초지자체, 마을 단 위에서 목표의 우선순 위가 나타날 것이며, 목표의 달성이나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목표 간 연계, 해당 목표와 관련된 부서 간 협력, 나아가 관련 시민사회 영역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가령 물 문제는 물 관련 목표인 6번 목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표와 영역이 물 문제를 고려하고, 물 목표는 모든 목표와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one for all, all for one)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 ‘지방의제21’에서 ‘지방 SDGs 2030’으로

-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에 근거한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의 수립과 실천이 전 세계의 지방정부에서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의 추상성을 벗어나 구체적인 의미를 담는 17개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성과 임무를 재인식하게 되는 전환점을 부여하게 됐다.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비교〉

| 구 분      |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
|----------|---|---|
| 채택연도     | 1992년   | 2015년   |
| 회의명칭     | 유엔환경개발회의  | 유엔총회(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
| 문서명칭     | 의제21 (Agenda 21)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br>(The 2030 Agenda for SD)   |
| 의제구성     | I. 전문 : 1장<br>II. 사회·경제부문 : 2~8장<br>III. 자원보전·관리 : 9~22장<br>IV. 주요그룹의 역할 : 23~32장<br>① 여성 ② 청소년 ③ 원주민<br>④ 민간단체 ⑤ 지방정부 ⑥ 노동조합<br>⑦ 산업계 ⑧ 과학계 ⑨ 농촌<br>V. 이행수단 : 33~40장 | I. 서문 : 5P 개요<br>II. 선언 : 머리말, 비전, 공유원칙과 약속, 오늘날의 세계, 새로운 의제, 이행 수단, 후속조치와 검토, 세계변화를 위한 행동 요구<br>III.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 :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0개 지표<br>IV.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br>V. 후속조치와 검토 : 국가, 지역, 세계차원 |
| 주요그룹     | 9개 주요 그룹  | 이해관계자 그룹(MGoS)  |
| 지방정부의 역할 | 제28장에 지방정부의 역할 명시<br>(지방의제21 추진 권고)   |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구별 없이 모든 지역에서 SDGs 추진 권고  |
| 주요특징     | ESSD(환경중점) 개념에서 출발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 차원의 실행계획으로서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의 제시가 없이 추상적 선언의 성격이 강함  | MDGs(사회중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와 지표(230여 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 기한을 2030년으로 제시함   |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계적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라는 공식 명칭을 정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을 내걸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과 같은 5대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19개 세부목표, 236개의 지표들(제4차 기본계획 기준)을 설정하여 정부기관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 그룹 등 다양한 집단에서 노력하고 있다.

## 국가 지속가능발전 배경

UN은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의 틀 내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부처간 협의와 국민참여에 기반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외형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양극화, 미세먼지 등 환경악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국민 삶의 질은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모순이 지속되어 왔다. 2017년 기준 OECD 삶의 질 지수는 38개국 중 29위로 2014년 25위에 비하여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2018년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했다. K-SDGs는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삶의 변화'와 포용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자료출처: 환경부\_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 K-SDGs 수립 및 제 4차 기본계획 수립

K-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아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 및 214개 지표로 구성됐다. 전체지표 중 UN-SDGs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지표는 122개로 전체의 57%를 차지하여 글로벌 지표와 국가 특화형 지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과거 국내 관련 지표들은 환경분야 중심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었으나 K-SDGs는 사회, 경제부문 지표가 보완되어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143개 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지표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가 비전에 따라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전문가 작업반에서 주도했다는 게 특징적이다. 이렇게 마련한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21-2040 기간의 지속가능발전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K-SDGs 목표 및 지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구성하였다. 현재에 근거하여 행동하기 위하여 현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정책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다.

###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개편 방향성

- ① 기존 K-SDGs 17개 목표체계를 그대로 유지
- ②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세부목표 및 지표 보완  
(122개 세부목표, 214개의 지표 →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
- ③ K-SDGs 달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17개 목표별 제시
- ④ 향후 5년 중점 추진 및 관리 필요한 정책목표 및 지표 선정

\*자료출처: 환경부\_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 K-SDGs 추진체계

K-SDGs 수립은 기존 하향식 방식과는 다르게 관계부처와 민간 작업반 및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참여를 통하여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2018년 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에 따라 민·관·학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 및 실무 테스크포스를 통하여 K-SDGs를 수립하도록 했다. 여기서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여 실제 목표설정 작업은 SDGs 목표별 민·관·학 합동 작업반에서 주도했다. 특히 국가 SDGs 포럼, 일반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K-SDGs를 마련하였다.



\*출처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자료출처: 환경부\_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 K-SDGs 수립과정

2018년 1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K-SDGs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그 이후 범부처 K-SDGs 협의체, 작업반, K-MGoS(Korean-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등을 구성하여 K-SDGs 수립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K-SDGs를 마련하였다.

## 전 국민이 참여한 K-SDGs

환경부는 2018년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동남권에서 시작하여 호남권과 수도권 순회하면서 K-SDGs 수립의의 및 과정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전문가, 지역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순회토론회 및 제1차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 2018년 10월 제2차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K-SDGs 비전 및 전략

- (비전) 포용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 지향점 및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위협 속에서 미래 한국의 지속가능성장을 추동할 핵심 가치로 ‘혁신’ 반영 \* (2018)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 ⇒ (2020)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국가 실현
- (전략) 기존에 수립한 5대 전략의 핵심 가치인 ‘사람’, ‘번영’, ‘환경’, ‘평화’, ‘협력’은 계승하되, 평화와 협력을 통합하여 4대 전략 마련

---

\*자료출처: 환경부\_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 K-SDGs 비전, 전략, 목표 〉

|                     |  |  |   |  |
|---------------------|--|--|---|--|
| 비전                  | <b>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실현</b>   |  |   |  |
| 전략                  | <b>사람</b><br>사람이 사람답게<br>살 수 있는<br>포용사회  | <b>번영</b><br>혁신적 성장을 통한<br>국민의 삶의 질<br>향상  | <b>환경</b><br>미래 세대가<br>함께 누리는<br>깨끗한 환경   | <b>평화·협력</b><br>지구촌 평화와<br>협력 강화   |
| K-SDGs<br>17개<br>목표 | <p><b>[목표1]</b><br/>빈곤층 감소와<br/>사회안전망 강화</p> <p><b>[목표2]</b><br/>식량안보 및 지속<br/>가능한 농업 강화</p> <p><b>[목표3]</b><br/>건강하고 행복한<br/>삶 보장</p> <p><b>[목표4]</b><br/>모두를 위한 양질의<br/>교육</p> <p><b>[목표5]</b><br/>성평등 보장</p> <p><b>[목표11]</b><br/>지속가능한 도시와<br/>주거지</p> | <p><b>[목표8]</b><br/>좋은 일자리 확대와<br/>경제성장</p> <p><b>[목표9]</b><br/>산업의 성장과 혁신<br/>활성화 및 사회<br/>기반시설 구축</p> <p><b>[목표10]</b><br/>모든 종류의 불평등<br/>해소</p> <p><b>[목표12]</b><br/>지속가능한 생산과<br/>소비</p> | <p><b>[목표6]</b><br/>건강하고 안전한<br/>물관리</p> <p><b>[목표7]</b><br/>에너지의 친환경적<br/>생산과 소비</p> <p><b>[목표13]</b><br/>기후변화와 대응</p> <p><b>[목표14]</b><br/>해양생태계 보전</p> <p><b>[목표15]</b><br/>육상생태계 보전</p> | <p><b>[목표16]</b><br/>평화·정의·포용</p> <p><b>[목표17]</b><br/>지구촌 협력<br/>강화</p> |

\*출처: 환경부,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1부

\*자료출처: 환경부\_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 SDGs 목표별 주요 법령 및 계획

| Goal                       | 주요 법률  | 주요 계획   | 주요 부처                              |
|----------------------------|--|---|------------------------------------|
| G1.<br>빈곤퇴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보장법</li> <li>사회보장기본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li> <li>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18-20)</li> </ul>                                | 보건복지부                              |
| G2.<br>기아종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기본계획(15-19)</li> </ul>  | 농림축산식품부<br>농촌진흥청                   |
| G3.<br>건강과 웰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증진법</li> <li>공공보건이료에 관한 법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16-20)</li> </ul>  | 보건복지부                              |
| G4.<br>양질의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기본법</li> <li>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li> <li>평생교육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12~)</li> <li>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 종합계획(13-17)</li> </ul>                                | 교육부<br>고용노동부                       |
| G5.<br>성평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성평등기본법</li> <li>여성발전기본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li> <li>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3-17)</li> </ul>                                  | 여성가족부                              |
| G6. 깨끗한위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법</li> <li>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 전국수도종합계획(16-25)</li> <li>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li> </ul>                                   | 환경부<br>국토교통부                       |
| G7.<br>모두를 위한<br>깨끗한 에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법</li> <li>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14-35)</li> <li>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14-35)</li> </ul>                                   | 산업통상자원부                            |
| G8.<br>양질의<br>일자리와<br>경제성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발전법</li> <li>중소기업기본법</li> <li>고용정책기본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미수립)</li> <li>고용정책기본계획(미수립)</li> </ul>  | 기획재정부<br>산업통상자원부<br>중소기업청<br>고용노동부 |
| G9.<br>산업, 혁신,<br>사회기반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기본법</li> <li>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11-20)</li> <li>지역산업 진흥계획(시도별)</li> </ul>  | 산업통상자원부<br>국토교통부<br>미래창조과학부        |
| G10.<br>불평등 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별금지 관련 법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야별 차별금지 및 약자 보호 관련 계획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li> </ul>   | 법무부<br>국가인권위원회                     |
| G11.<br>지속가능한<br>도시와 공동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i> <li>환경정책기본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계획(광역시, 시군) 제4차 국가환경 종합계획(16-35)</li> </ul>  | 국토교통부<br>환경부                       |
| G12.<br>지속가능한<br>생산과 소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순환기본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순환 기본계획(수립예정)</li> </ul>   | 환경부                                |
| G13.<br>기후변화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4-18)</li> <li>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7-36)</li> <li>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6-20)</li> </ul> | 국무조정실<br>기획재정부<br>산업통상자원부          |
| G14.<br>해양생태계<br>보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환경관리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11-20)</li> </ul>   | 해양수산부<br>환경부                       |

\*자료출처: 환경부\_2022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최종본

| Goal                       | 주요 법률   | 주요 계획   | 주요 부처      |
|----------------------------|---|---|------------|
| G15.<br>육상생태계<br>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보전법</li> <li>• 산림보호법</li> <li>•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16-25)</li> <li>•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14-18)</li> <li>•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13-17)</li> </ul> | 산림청<br>환경부 |
| G16.<br>정의, 평화,<br>효과적인 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li> <li>•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li> <li>• 청탁금지법</li> </ul> |   | 법무부        |

\*출처 : 환경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현황 및 추진과제 분석 연구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제도 및 추진체계

| 구 분    | 내 용   |
|--------|---|
| 관련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법」</li> <li>- '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li> <li>- '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li> <li>- '22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li> </ul>  |
| 관련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li> <li>-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7조에 근거</li> <li>-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li> <li>- 2년 단위 이행 점검</li> </ul>   |
| 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 위원회</li> <li>- 소속: 환경부장관 ('00년 대통령소속 출범→'10년 환경부장관소속 전환→'22년 대통령소속으로 재전환)</li> <li>- 구성: 본위원회 60인 이내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전문위원회</li> </ul>   |
| 위원회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변경</li> <li>◦ 중앙추진계획 협의·조정</li> <li>◦ 정책의견 제시</li> <li>◦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li> <li>◦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li> <li>◦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 보급</li> <li>◦ 교육 및 홍보</li> <li>◦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li> </ul> |

\*자료출처: 환경부\_2022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최종본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략별 K-SDGs 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 전략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   |  |
|--|---|--|
| 목표   | 세부목표 주요내용   | 주요 정책  |
|  <p>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인구 비율 감소</li> <li>-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최소화</li> <li>- 빈곤층·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강화 및 재난회복력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li> <li>-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li> <li>-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li> <li>-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시스템 강화</li> </ul>  |
|  <p>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식량접근성 보장</li> <li>-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li> <li>-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li> <li>- 유전적 다양성 유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급식 활성화</li> <li>-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 확대</li> <li>-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li> <li>- 친환경 농업 확산</li> <li>- 농업유전자원 다양성 유지</li> <li>- 쌀 수급 안정</li> </ul>                                       |
|  <p>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질환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li> <li>- 교통사고 등 인명사고 사망 예방</li> <li>- 감염병 예방 및 관리</li> <li>- 모성 및 아동·청소년 건강 보호</li> <li>-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사망 감소</li> <li>- 저출생 극복 및 고령화 대비</li> <li>- 보편적 의료보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질환 관리</li> <li>- 자살 고위험 집단 관리</li> <li>- 감염병 발생 및 피해 최소화</li> <li>- 고령화 대비 관리체계 구축</li> <li>- 공공의료기관 접근성 제고</li> </ul>  |
|  <p>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초·중등교육 이수</li> <li>-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의 평등한 접근</li> <li>- 지속가능발전교육 확대</li> <li>- 전문 및 직업기술인 양성</li> <li>- 취약계층 교육접근성 보장</li> <li>-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환경 제공</li> <li>- 재정 및 교사 확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교육 신뢰 제고</li> <li>- 고등교육 기회 확대</li> <li>- 평생교육 직업교육훈련·지속가능발전 교육 강화</li> <li>- 소외계층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학습권 보장</li> <li>- 균등 교육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li> <li>- 교원 전문성 강화</li> </ul>         |
|  <p>5 성평등 보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 및 인신매매, 성착취 철폐</li> <li>- 돌봄 및 가사노동 가치 부여</li> <li>- 여성 리더십 기회 보장</li> <li>- 여성 기술접근 확대</li> <li>- 여성인력 양성</li> <li>- 성평등 정책·법 채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인식 확산</li> <li>- 여성폭력 근절·예방</li> <li>- 평등한 일 권리, 기회 보장</li> <li>-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li> <li>- 여성 대표성 제고</li> </ul>   |
|  <p>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서비스 접근성 보장</li> <li>- 안전하고 적정가격 교통시스템 제공</li> <li>- 도시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li> <li>- 세계유산 보호·보존</li> <li>- 재난피해 감소</li> <li>- 도시의 환경영향 감소 (대기질, 폐기물)</li> <li>- 공공 녹지공간 접근 보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 주거지원</li> <li>- 무주택자 주택공급 확대</li> <li>- 노후·취약 주거지 개선</li> <li>-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li> <li>-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li> <li>- 도시자연 확충</li> <li>-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li> </ul> |

\*자료출처: 환경부\_2022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최종본

## 전략2.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목표  | 세부목표 주요내용   | 주요 정책  |
|---|---|--|
|  <p>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li> <li>- 좋은 일자리 창출</li> <li>-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촉진</li> <li>- 동일노동·동일임금</li> <li>- 취약그룹 노동자권리 보호</li> <li>- 안전한 근로 환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적 포용성장 기반 마련</li> <li>- 취약계층 대상 노동정책 강화</li> <li>- 코로나19 위기 대비 안전망 확충</li> <li>- 중소·벤처·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li> <li>- 청년 구직 지원</li> <li>- 일·생활 균형 확보</li> </ul>    |
|  <p>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기업활동</li> <li>- 기술·혁신 촉진</li> <li>- 자원효율성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혁신금융</li> <li>- 혁신성장동력 육성</li> <li>-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고도화</li> <li>- 정부 R&amp;D 투자시스템 혁신</li> <li>- 자원순환성 고려한 제품 설계</li> </ul>                  |
|  <p>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위 40%인구 가처분소득 증가</li> <li>-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 확대</li> <li>- 공정한 기회 제공</li> <li>- 재정·임금·사회보호정책 강화</li> <li>- 인권중심적 이민정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li> <li>-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지원</li> <li>-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각해소</li> <li>-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li> <li>- 이민 정착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li> </ul>                    |
|  <p>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의 효율적 사용</li> <li>- 식품손실 감소</li> <li>- 화학물질 관리 강화</li> <li>- 폐기물 발생 감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순환성 고려한 제품 설계</li> <li>-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li> <li>-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li> <li>- 재활용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li> <li>- 생산단계 및 생활속 폐기물 감축</li> <li>-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li> </ul> |



\*자료출처: 환경부\_2022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최종본

### 전략3. 미래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 목표  | 세부목표 주요내용   | 주요 정책  |
|---|---|--|
|  <p>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식수와 하수도 서비스</li> <li>- 수질 개선</li> <li>-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li> <li>- 물공급 안정</li> <li>-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li> <li>- 건강한 물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물의 안정적 이용</li> <li>- 하수처리장 개선 및 기능 확대</li> <li>- 상수 오염원 억제</li> <li>- 물부족 대응역량 강화</li> <li>- 물순환 정책강화</li> <li>-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li> <li>- 물관리 시민 참여지원 확대</li> </ul>  |
|  <p>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서비스 접근</li> <li>- 청정에너지 공급 증대</li> <li>- 에너지 효율 향상</li> <li>- 대기오염 최소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에너지 사회 수용성 강화</li> <li>-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li> <li>- 신축건물 에너지 효율화</li> <li>- 그린뉴딜 관련 에너지산업 육성</li> </ul>  |
|  <p>13 기후변화의 대응</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위험 감소</li> <li>- 자연재해 회복 및 대응능력 강화</li> <li>-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2°C 아래로 유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정책 통합 모니터링</li> <li>- 기후재난 대응역량 강화 및 제도정비</li> <li>- 기후변화 중장기 영향 평가 능력 강화</li> <li>- 기후변화 교육 강화</li> <li>- 온실가스 감축이행 점검 평가체계 고도화</li> </ul>                        |
|  <p>14 해양생태계 보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 보전</li> <li>- 생태환경 및 수산자원 서식처 관리</li> <li>- 해양 산성화 영향 최소화</li> <li>- 과도한 어업 지양</li> <li>- 해양보호구역 면적 확대</li> <li>- 연구역량 제고 및 안정적 어업행위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상 오염물질 차단</li> <li>- 해양플라스틱 저감</li> <li>- 해양생태계 서식지 및 해양생물 보호</li> <li>- 불법어업 근절</li> <li>- 해양보호구역 확대</li> <li>- 해양신산업 육성</li> <li>- 어업인 복지여건 개선</li> </ul>            |
|  <p>15 육상생태계 보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 다양화를 위한 보전활동 활성화</li> <li>- 황폐화된 산림 및 토지복원</li> <li>- 생물다양성 손실예방</li> <li>- 멸종위기종 보호</li> <li>- 야생동물과 인간 접촉점 관리</li> <li>- 침입외래종 영향 감소</li> <li>- 생태축 복원 및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지 보전</li> <li>- 산림생물 다양성 확보 및 DMZ생태보전</li> <li>- 산림복원 및 토지복원</li> <li>- 멸종위기종 관리·복원</li> <li>- 야생동물 이용 및 접촉 관리</li> <li>- 침입외래종 관리체계 구축</li> <li>- 도시생태축 복원</li> </ul> |

\*자료출처: 환경부\_2022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최종본

## 전략4.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 목표  | 세부목표 주요내용  | 주요 정책   |
|---|--|---|
|  <p>16 평화·정의·포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치증진</li> <li>- 평등한 사법제도 마련</li> <li>-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 추진</li> <li>-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 감소</li> <li>- 아동 폭력 종식</li> <li>- 불법 자금과 조직범죄 퇴치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감소</li> <li>- 의사결정에 시민참여 보장</li> <li>- 정보접근 및 자유 보호</li> <li>- 차별 지양 법·정책 수립</li> <li>- 디지털 인권 보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li> <li>- 마약·조직범죄 퇴치</li> <li>- 공정행정</li> <li>-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li> <li>- 국민 정보접근성 보장</li> <li>-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li> </ul>  |
|  <p>17 지구촌 협력 강화</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 SDGs 지원 확대</li> <li>- 다자무역체제 촉진</li> <li>- 개도국 과학기술 혁신 지원</li> <li>-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사회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ODA 기본계획 수립</li> <li>-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ODA 효율성 제고</li> <li>- 개도국 투자 증대 촉진</li> <li>- 다양한 협력기구 선정 및 다자협력협의체 운영</li> </ul> |

\*자료출처: 환경부\_2022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최종본

#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의 필요성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의제21이나 지방의제21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SDGs 목표 수립과 달성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의 중요한 주체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2030 의제 45조에서도 각국은 SDGs를 실행할 때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지방 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은 정해진 의제를 지방정부가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SDGs의 지방화(localizing SDGs)를 강조한다. 정책 결정, 변화의 촉진자, 지구적 목표와 지역사회 연계 고리로서의 역할을 지방정부가 해야한다.
- SDGs가 발표된 이후 전 세계 국가 및 지자체는 각자 상황에 맞는 SDGs를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뉴욕시를 시작으로 영국의 브리스톨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시 등이 ‘SDGs를 위한 지방 주도의 전환’을 표방하며, ‘자발적 국가 평가 (VNR : Voluntary National Review)’와는 별도로 ‘자발적 지방 평가 (VLR : Voluntary Local Review)’ 보고서를 내고 있다.

---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 21세기형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지방 SDGs

- SDGs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 경제위기,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이념과 철학을 담고 있으며, 현재 세대가 지향해야 할 숙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 SDGs가 정치적·상징적 언어로서 총론적 수준의 선언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SDGs 설정은 물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행계획과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도출이 뒤따라야 하며, SDGs의 목표와 지표들이 모든 정책 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한다.
- SDGs는 환경, 경제, 사회 등 행정 각 부문 간 융합적·협업적 정책과제의 도출과 더불어 시민, 기업, 행정 등 주요 주체들 간의 협력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

## 지방 SDGs 작성의 원칙

- 원칙 1 : 지역특화형 SDGs 작성
  - UN SDGs 2030, K-SDGs 2030과 연계하여 17개로 구성된 목표체계를 따르되, 세부목표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형” SDGs를 수립

〈예시〉 충남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 에너지 공급 체계와 관련한 송전탑 갈등을 겪은 데다 화력발전소가 신설되기도 한 당진시에서는 7번 목표를 ‘에너지 정의 실현’으로 설정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 원칙 2 : 주요 중장기계획들과의 연계

- 도시계획, 종합발전계획, 분야별 계획 등 주요 중장기계획들과 연계하여 정책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작성

〈예시〉 서울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 서울시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제정 또는 개정 때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전검토를 수행

| 세부평가 항목 |   | 평가   | 의견   |
|---------|---|--|--|
| 경제분야    |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관광, 여행, 비즈니스를 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사항은 없는지 여부 | 우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br>보통 <input type="checkbox"/><br>보완 <input type="checkbox"/> | <b>(검토의견)</b><br>-관광객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적기 개선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우수<br>-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우수관광기업을 육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예상   |
| 협치분야    |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제시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 우수 <input type="checkbox"/><br>보통 <input type="checkbox"/><br>보완 <input checked="" type="checkbox"/> | <b>(보완의견)</b><br>-최근 투어리스트피케이션( touristification)과 같이 주거지역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및 상시적 소통 창구 마련 필요<br>-공청회 등의 개최로 지역주민과 관광취약계층 등 모두를 배려하는 관광(Tourism for All)실현 방안 강구 |

■ 원칙 3 : SDGs 목표들간의 연계

- 환경·사회·경제 분과로 나누는 ‘칸막이’형 작성을 배제하고, 통합적·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유엔의 목표간 연계성(Nexus) 전략에 따라 작성함

〈예시〉 종로구 마을 단위 목표 간 연계

- 종로구는 각 부서가 마을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각 목표와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음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 원칙 4 :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형 방식에 의한 작성
  - 지역의 다양한 주체(행정·시민·기업), 이해관계자 그룹(MGoS) 등이 함께 참여하여 SDGs를 작성하고 이행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

〈예시〉 수원시 SDGs 민관협력 체계

- 수원시는 행정-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

## II.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개  
주요연혁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설치배경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위한 실천 활동으로 국가 및 지방 정부에서 ‘의제21(Agenda 21)’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자치의 새로운 상징적 운동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실천하는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2000년 6월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창립했다.

이후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000년 7월 28일에 ‘전라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가 창립했다.

그리고 2015년 유엔개발정상회의(UNGA)에서 ‘세계의 변혁: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보고서를 발표하고 같은 해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이에 2016년 정기총회에서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 현황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운영위원회와 4개 상임위원회(SDGs정책위원회, 사람위원회, 경제위원회, 환경위원회), 3개 실행위원회(전북시군협의회, 기후환경위원회, ESD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전라북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립근거가 마련된 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임실, 장수, 김제, 진안, 무주 9곳이며, 사업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장수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5곳이다.

\*고창, 완주, 김제, 부안은 사업비를 받아 운영될 수 있게 준비 중임.

## 조직도



〈그림 30〉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도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요 연혁

- 1997년 :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북환경21’ 작성공포
- 2000년 :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개정 ‘전북환경21실천협의회 설치 근거 명기’  
: ‘전라북도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 7월 28일, ‘전라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창립
- 2001년 : 전북의제21 총괄보고서 ‘푸른약속 전북21’ 의제 보고서 발간  
: 제3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개최
- 2002년 :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민관학협의회 구성
- 2005년 : 전북환경교육네트워크 구성
- 2007년 :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  
: 전북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성  
: 전북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 독립(2004~2006)
- 2009년 : 전북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  
: 그린리더 양성 및 에코홈닥터를 통한 가정에너지 컨설팅
- 2011년 : 전라북도환경교육네트워크 창립  
: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설립
- 2012년 :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VISION 2020’ 선포식 및 보고서 발간  
: 전라북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 독립(2009~2011)
- 2016년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  
: 2016 영·호남·제주 지속가능발전포럼 개최  
: 도민참여형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원탁회의 주관
- 2017년 : 제13회 한국환경교육한마당 주관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럼  
: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시범사업 컨설팅(2015~2017/10개소)
- 2018년 : 자원순환실천마을사업 컨설팅(2017~2018/12개소)
- 2019년 : 그린웨이환경축제 진행(2008~2019)

- : 아동청소년 차별사례 공모전 진행
- :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컨설팅(2018~2019/20개소)
- : 만경강 생물다양성 조사
- 2020년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지표 개발 연구
  - :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20주년 포토북 발간
  - : 만경강 신천습지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 주관
- 2021년 : 제23회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공동주관
- 2022년 :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수립(17개 목표, 81개 세부목표, 153개 지표)
- 2023년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9개 지표)
  - : 전북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 주관(2015~현재)
  - : 와글와글 환경학교 진행(2017~현재)
  - : 플라스틱 없는 전북만들기 진행(2019~현재 / 1회용 플라스틱 90만개 절감)
  - : 전라북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2012~현재/매년 4천여명 교육)
  - :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2009~현재 / 연 3천여 개소 에너지컨설팅)
  - :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진행(9개 공동체 참여)
  - : 전북RE100시민클럽 운영(2022~현재)
  -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동그라미점빵’ 운영(2022~현재)



## 주요 수상내역

### 2011년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

- **마을단위 지속가능성 확보와 민관협력을 위한 “전라북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 구축”**
  - 전라북도 지방의제21 내용으로 채택된 마을만들기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라북도마을만들기지원조례” 제정과 “전라북도마을만들기 협력센터” 구축

### 2016년 지속가능발전대상 국무총리상

- **에너지자립, 말이 씨가 되다 -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 “농촌·도시형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의제 실천을 위해 농촌의 에너지 문제를 주민 교육과 에너지자립으로 해결하여 농촌마을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선도적 모델 제시

### 2017년 지속가능발전대상 환경부장관상

- **민·관·기업의 공동기획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그린웨이환경축제”**
  - 전라북도와 기업, 환경단체가 함께 기획하고 준비해 환경이슈와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시키고 환경보존을 위해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한마당

### 2020년 지속가능발전대상 국무총리상

- **제로플라스틱전북 객리단길 시범사업**
  - 전 세계적 문제인 1회용 플라스틱 범람에 따른 거버넌스적 해결방안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해 공유컵(TURN블러)을 사용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모델을 구축하여 제로플라스틱 운동을 확산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가 중심으로 달성해야 하는 17가지 목표

## II.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소개

#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

## Jellabuk-d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추진과정

2018년 12월 24일, 환경부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라 한다)를 수립했다. 이미 2015년 9월에 유엔(UN)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라 한다)를 채택했으며,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엔의 SDGs를 자국화하여 각 국가별로 SDGs를 마련했다. 이같이 국제적 정세에 대응하여 수립한 한국형 SDGs인 K-SDGs는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의 이정표로 설정한 것이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수립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수립이 활성화되었다. 2019년,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전북지속협'이라 한다)에서도 전라북도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해 이미 SDGs를 수립한 당진시와 경기도를 방문해 해당 지역의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지표, 평가 등 수립 전 과정에 대해 공부하였고,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J-SDGs'라 한다)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J-SDGs 수립을 위해 전라북도 행정과의 사전 논의 후 2020년도 전북지속협 본 사업비로 예산을 마련하였다. 당초 계획으로는 20년도 초부터 J-SDGs 수립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작시기를 20년도 6월로 늦췄고, 마침내 20년 6월 11일, J-SDGs 수립을 위한 추진위원 통합워크숍을 시작으로 J-SDGs 수립이 본격화 되었다.

추진위원은 J-SDGs 수립의 큰 틀을 논의하는 기획단과 실질적 내용인 세부목표 및 지표를 논의하는 분야별(사람, 사회, 환경) 위원회로 구성하였다. 분야별 위원회가 다뤄야 할 SDGs 목표는 사람위원회가 G1, 2, 3, 4, 5번을, 경제위원회는 G8, 9, 10, 11, 12

번을, 환경위원회는 G6, 7, 13, 14, 15번을 논의했으며, G16, 17번은 공통의 목표로 설정하여 모든 위원회에서 내용을 다뤘다.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J-SDGs 수립 및 지표 개발 연구' 용역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SDGs 사례 분석과 국내·외적 SDGs 동향 분석, J-SDGs 수립 및 지표 설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J-SDGs 이행 평가 및 환류 프레임워크 개발 등 J-SDGs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 J-SDGs 수립을 위한 논의가 뜨겁게 달궜다. 분야별 위원회 회의 뿐 아니라 SDGs 목표별 논의를 위한 소모임도 만들어 J-SDGs 수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J-SDGs 수립을 위해 진행한 회의는 20년 6월부터 22년 5월까지 약 2년간 기획단 9회, 사람위원회 36회, 경제위원회 32회, 환경위원회 42회로 총 119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대망의 2021년 12월 9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지속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그간 환경부 소속이었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과거의 위상을 회복함과 동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생기게 되었고, 지속법에 근거하여 SDGs 홍보 및 교육, 숙의공론화장 운영 등 민관협력을 위한 파트너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자리매김할 명분이 생겼다.

지속법이 제정됨에 따라 J-SDGs 수립, 기본전략, 추진계획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되었고, 이에 맞춰 2022년 9월, 전북지속협에서 17개 목표, 81개 세부목표, 153개 지표로 정리된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를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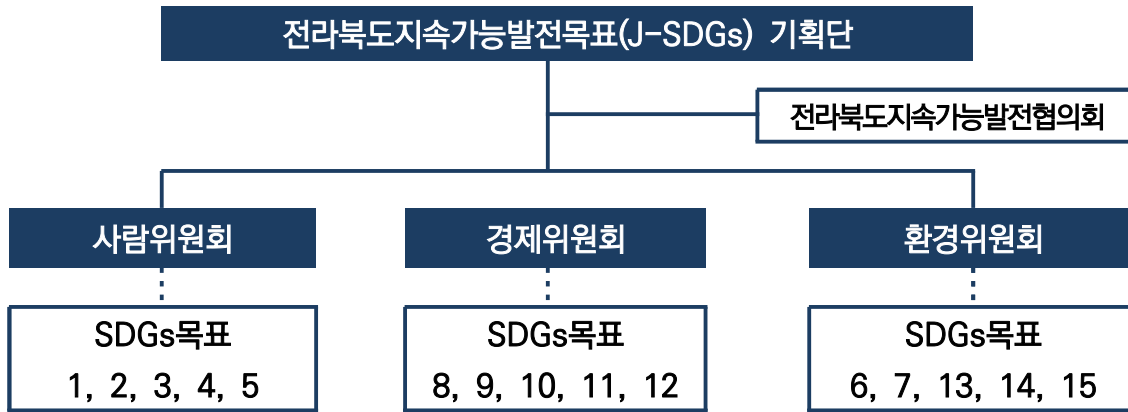
또한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됨에 따라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기존 환경복지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환경에 국한된 사업 및 목표설정이 아닌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이에 2023년도에는 수립된 J-SDGs를 평가·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시범지표를 선정해 모니터링하여 결과를 알아봤고, 이후 행정에 제안해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 모니터링을 함께하고자 한다.

## 조직구성

### ■ J-SDGs 기획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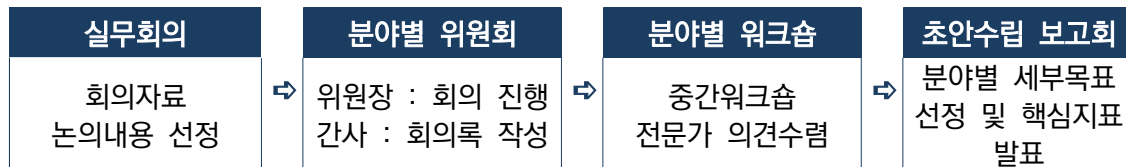
- 구성 : 전북지속협 사무처, 도내 전문가, 3개 위원장 등
- 비전 설정 기본계획 수립, 내용, 방법, 주체, 과정 방식 등 설정



〈표 9〉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기획단 조직구성

### ■ 분야별 위원회 구성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위원회를 J-SDGs 분야별 위원회로 한시적 운영
- 사람, 사회, 환경위원회를 전북지속협 분과위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 진행
- 3개 분야 위원회별 회의를 통해 세부목표 및 지표를 작성



〈표 10〉 3개 위원회 논의 구조

- **사람위원회**
  - ① 빈곤층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②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 ③ 건강하고 행복한 삶                      ④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 ⑤ 성평등 보장
- **경제위원회**
  - ⑧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⑨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 ⑩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 ⑫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환경위원회**
  - ⑥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⑦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⑬ 기후변화 대응
  - ⑭ 해양생태계 보전                      ⑮ 육상생태계 보전

〈그림 31〉 위원회별 지속가능발전목표

**주요내용**

-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수립 및 지표 개발 연구
  - 전북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지표 개발 연구' 용역
  - 타 지방자치단체 SDGs 사례 및 국내·외적 SDGs 동향 분석
  - J-SDGs 수립 및 지표 설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 J-SDGs 이행 평가 및 환류 프레임워크 개발
-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수립
  - J-SDGs 기획단 및 분야별 위원회 운영
  -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초안 작성
- 의견수렴 및 협력기관 파트너십 구축
  - 사람, 사회, 환경 그룹별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을 J-SDGs 수립·이행을 위한 파트너 기관으로 등록, 협력체계 구축
  - 도 주관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중간 및 최종보고회 참여(의견제출 및 검토)
  - 시민사회 및 전문가 그룹, 행정 주무부서 검토 및 협의
  - 참여기관(단체)별 이행목표에 따른 J-SDGs 참여인증 현판제작 및 부착



## ■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 목표                                    | 번호  | 세부목표   | 지표   |
|---------------------------------------|-----|--|--|
| SDGs 1<br>빈곤층<br>감소와<br>사회안전망<br>강화   | 1.1 | 취약계층 빈곤퇴치시스템을<br>구축하고 이를 강화한다                    | ① 취약계층 빈곤지수<br>② 청년빈곤층의 취·창업지원<br>프로그램 수   |
|                                       | 1.2 |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유형별<br>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 ① 지자체의 신규 복지 사업 수<br>② 복지시설 증가율(%)   |
|                                       | 1.3 |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br>경제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① 노인취업률<br>② 6개월 이내 자활근로 유지 비율   |
| SDGs 2<br>식량안보<br>및<br>지속가능한<br>농업 강화 | 2.1 | 농업생산 및 농업인구, 농지보전을<br>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조례를<br>제정한다    | ① 절대농지 면적<br>② 친환경 농업 육성, 로컬푸드 등<br>관련 조례 수  |
|                                       | 2.2 | 친환경 농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 ① 친환경 농축산인력 양성 및 교육<br>운영 프로그램 수<br>② 친환경 농산물 면적                                     |
|                                       | 2.3 | 종자 보존체계를 구축하여<br>식량안보를 이룬다                       | ① 종자산업 육성 수 및 거래량, 규모  |
|                                       | 2.4 | 농식품·생명산업, 디지털 농업<br>기반을 구축한다                     | ①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
|                                       | 2.5 | 농업의 후계인력과 주민 공동체<br>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사회를<br>구축한다   | ① 도농 융합 상생 마을 수<br>② 귀농·귀촌 인구수<br>③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인 수<br>④ 농촌 생활문화공동체 수<br>⑤ 건강생활지원센터 수 |
| SDGs 3<br>건강하고<br>행복한 삶<br>보장         | 3.1 | 선도적인 전복형 공공의료 체계를<br>마련한다                        | ①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br>② 감염병치료 전담병상 확보율<br>③ 중증환자 전담병상 수<br>④ 감염병치료 전담의료인력 확보율       |
|                                       | 3.2 |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신건강<br>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br>제공한다 | ① 정신건강 관리 공공의료 기관 수<br>② 심리 상담 기관 수  |
|                                       | 3.3 | 여가생활을 위한 인프라와 예산을<br>확충한다                        | ① 시·군별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br>시설 수   |

| 목표                      | 번호  | 세부목표  | 지표  |
|-------------------------|-----|---|---|
|                         | 3.4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이동권을 보장한다                             | ①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시설 비율<br>*고령자·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
|                         | 3.5 | 도내 치매 관리 강화를 위한 치매 지원체계를 제도화한다                    | 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환자 등록·관리율  |
|                         | 3.6 | 기부와 봉사 활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① 인구 대비 실제 자원봉사자 수<br>② 자원봉사 1명당 연평균 활동 시간  |
|                         | 3.7 | 도민의 참여로 미래유산 발굴을 확대하고 생활예술 향유를 위한 공공 지원을 확대한다     | ① 시·군별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설치 수   |
| SDGs 4<br>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 4.1 | 취학 전 모든 아동이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① 국공립 어린이집 수 및 이용률<br>② 국공립 유치원 수 및 이용률   |
|                         | 4.2 | 학교, 마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축한다                    | ① 공공돌봄 시설의 수<br>② 마을 교육공동체 수<br>③ 청소년 단체활동 참여율<br>④ 초·중·고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                                    |
|                         | 4.3 | 전북도민에게 평생학습(자기계발) 및 직업능력 계발 기회를 보장한다              |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참여자 수<br>② 성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수<br>③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참여자 수   |
|                         | 4.4 | 전북도민의 지식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기반을 구축한다                      | ① 공공도서관 수<br>② 지역 서점의 수   |
|                         | 4.5 | 전북도민의 정보화 활용능력 함양 기회를 제공한다                        | ① 성인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 프로그램 수<br>*디지털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을 촉진하는 사회 운동                             |
|                         | 4.6 | 전북도민의 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 ① 지역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br>② 지역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이용자 수   |
|                         | 4.7 | 전북도민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기반을 구축한다                       | ① 지속가능발전교육(환경, 사회적경제, 세계시민교육 등)의 참여학교 및 교육 이수자 수  |

| 목표                           | 번호                       | 세부목표  | 지표  |
|------------------------------|--------------------------|---|---|
| SDGs 5<br>성평등<br>보장          |                          |   | ②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수                               |
|                              | 5.1                      | 성평등 포용 사회를 실현한다   | ① 지역 성평등 지수<br>② 성인지 교육의 프로그램 수                 |
|                              | 5.2                      | 성평등 사회 정착을 위한<br>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 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br>② 가정폭력 신고 건 수              |
|                              | 5.3                      | 성숙한 젠더 의식을 갖도록 한다   | ① 성 소수자 및 차별금지 교육의<br>프로그램 수                    |
|                              | 5.4                      |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고 조직<br>내 공평한 의사결정 참여를<br>보장한다  | ① 관리직 공무원(5급 이상)의 여성<br>비율<br>② 지방의회의 여성 정치인 비율 |
| 5.5                          | 남녀가 가사와 육아를 공평하게<br>분담한다 | ① 육아 휴직자의 성비<br>② 남녀 가사노동 참여 정도   |   |
| SDGs 6<br>건강하고<br>안전한<br>물관리 | 6.1                      |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br>공평하게 공급한다   | ① 수돗물 음용 비율                                     |
|                              | 6.2                      | 물 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br>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br>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하수도 보급률                                       |
|                              | 6.3                      | 물순환 개선, 물 재이용 활성화,<br>수질 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및<br>위험 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br>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재고한다 | ① 빗물 저장고 설치용량<br>② 비점오염 저류시설 확보 수(수량)           |
|                              | 6.4                      | 물 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 공급을<br>안정화하고, 누수 없는 수돗물<br>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화를<br>추구한다                      | ① 상수도 누수 신고 건수<br>② 상수도 유수율                     |
|                              | 6.5                      | 수질오염 총량제를 통한 통합적<br>수질 관리를 이행한다   | ① 새만금호 수질 등급(TOC기준)<br>*TOC = 총 유기탄소량           |
|                              | 6.6                      | 수생태계(습지, 강, 대수층, 호수)를<br>보호하고 복원한다  | ① 하천의 환경생태 유량 보유율                               |
|                              | 6.7                      |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br>지역 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br>강화한다   | ① 지자체 수질 보전 활동 예산                               |
| SDGs 7<br>에너지의               | 7.1                      |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br>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   | ① 태양광 보급률 (10kw 이하)                             |

| 목표  | 번호   | 세부목표                                | 지표   |
|---|------|-------------------------------------|--|
| 친환경적<br>생산과<br>소비   | 7.2  | 국가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br>발전을 증대한다          | ① 재생에너지 생산량<br>(새만금 생산량 제외)  |
|   | 7.3  |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효율을<br>향상시킨다           | ① 지자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건수  |
|   | 7.4  | 운송 분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br>대기 오염을 최소화한다   | ① 친환경 자동차 보급 대 수<br>*전기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중심                               |
| SDGs 8<br>좋은<br>일자리<br>확대와<br>경제성장                        | 8.1  | 전북형 뉴딜 추진을 통한 전북의<br>대도약을 실현한다      | ① 동부권 균형발전사업(농·축산<br>식품, 관광) 예산 규모<br>② 전북형 뉴딜 일자리 창출 수              |
|   | 8.2  | 지역 소득을 높이고, 고용률 향상을<br>위해 노력한다      | ①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br>② 고용률  |
|   | 8.3  |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br>실업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 ① 청년 창업 및 폐업 건수<br>② 지역 내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율<br>③ 도내 청년 고용시 인센티브<br>지원금액 |
|   | 8.4  | 공공적 가치의 지역 사업체를<br>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 ① 공공적 가치의 지역 사업체 활성화<br>지원 규모<br>② 공공 구매의 지역업체 비율                    |
|   | 8.5  | 우수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 ① 지역 내 분야별 우수 강소기업 수   |
| SDGs 9<br>산업의<br>성장<br>혁신<br>활성화<br>및<br>사회기반<br>시설<br>구축 | 9.1  | 사회적 경제를 적극 지원하고<br>육성한다             | ① 사회적 경제 기업 수<br>② 사회적 경제 기업 매출액<br>③ 사회적 기업 육성프로그램 수                |
|   | 9.2  |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스마트농법<br>보급을 확대한다       | ① 시설재배 관련 기술교육 이수자 수<br>② 스마트농법 재배 농가의 수                             |
|   | 9.3  | 친환경 첨단교통 시스템을<br>구축한다               | ① 공유 모빌리티 수<br>② AI 및 자동관리 시스템 구축                                    |
| SDGs 10<br>모든<br>종류의<br>불평등<br>해소                         | 10.1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br>편의시설과 복지혜택을 확대한다    | ① 저상버스 도입률(%)<br>② 인구 대비 전문 의료 인력 비율<br>③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보급률             |
|   | 10.2 |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br>취업 환경을 조성한다       | ①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비<br>② 장애인 취업률(%)                                       |

| 목표                          | 번호   | 세부목표                             | 지표   |
|-----------------------------|------|----------------------------------|--|
|                             | 10.3 | 전라북도민의 성별,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한다        | ① 가정위탁,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지원예산<br>② 육아휴직 이용률<br>③ 아동·노인 학대 신고 건수<br>④ 기업 규모별 남녀 비율         |
|                             | 10.4 | 경력단절 인력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 ① 출산 여성 취업률<br>② 생산연령인구 재취업률   |
| SDGs 11<br>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 11.1 |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한다               | 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
|                             | 11.2 | 인구절벽을 대비한 출생률 제고 대책을 추진한다        | ① 신생아 출생률<br>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규모<br>③ 신혼 보금자리 지원예산<br>④ 다함께 돌봄센터 증가 수               |
|                             | 11.3 | 생태도시 녹색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① 생태 보행로(둘레길, 생태탐방로) 확보율<br>② 도시녹지율<br>③ 도심 일몰제 공원 매수율<br>④ 자전거 전용도로 증가율             |
|                             | 11.4 |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체계를 구축한다             | ① 재난대비 훈련 건수<br>② 취약지 점검 횟수<br>③ 복구 장비 보유량<br>④ 재난관리 전문인력 확보 수<br>⑤ 경계경보 안내 시스템      |
|                             | 11.5 | 초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생활복지를 향상한다      | ① 노인전문 요양시설 수<br>② 노인여가 복지시설 수<br>③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
| SDGs 12<br>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12.1 | 자원 재순환 및 친환경 제품 소비 촉진 생활문화를 정착한다 | ① 친환경 제품 생산 증가율<br>② 공공기관 친환경 제품 의무구매율<br>③ 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률(%)<br>④ 자원 재순환을 위한 보상 예산 |
|                             | 12.2 |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확대한다            | ① 인구 1만 명당 로컬푸드 참여 농민 수<br>② 학교급식 로컬푸드 구매 비중<br>③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br>④ 잔류농약 허용치 위반 건수    |

| 목표                         | 번호   | 세부목표  | 지표   |
|----------------------------|------|---|--|
| SDGs 13<br>기후변화<br>와 대응    |      |   | ⑤ 먹거리 관련 위원회 운영 평가   |
|                            | 12.3 | 소비자 및 생산자 권익을 위한<br>공정거래를 정착한다  | ① 불공정거래 위반 건수<br>② 소비자 피해 발생 건수<br>③ CCM(소비자중심경영마크) 인증 건수    |
|                            | 13.1 |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br>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br>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 ① 농·축·수산 자연재해(폭염, 폭우,<br>태풍, 폭설, 한파 등) 보험 가입<br>지자체 지원액      |
|                            | 13.2 |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br>및 지방정책 등에 반영하도록<br>노력한다                                    | ① 친환경 차량 충전소 수(완속/급속)<br>② 일반 주유소 수                          |
|                            | 13.3 |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br>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br>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 ① 기후변화 대응 교육 참여자 수<br>② 전라북도 생산된 저탄소 라벨링<br>제품 수             |
|                            | 13.4 |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br>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br>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br>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 ①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부문별)  |
| SDGs 14<br>해양<br>생태계<br>보전 | 14.1 | 육상과 해양의 오염물질로부터<br>해양환경을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br>확립한다                                   | ① 수질평가 지수 값을 이용한<br>새만금 외 해역 해수 수질 등급<br>[환경부기준(TOC, COD 등)] |
|                            | 14.2 |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br>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 ① 해양 개발 시설 면적(인공어초,<br>재생에너지, 골재채취 등)                        |
|                            | 14.3 | 과학 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br>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br>최소화한다                                    | ① 연안 산성화 전라북도 모니터링<br>횟수(연간)                                 |
|                            | 14.4 |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br>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 ① (연간) 불법 어구·시설물 감시 및<br>철거 횟수                               |
|                            | 14.5 |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br>현명한 이용을 통해 해양보호구역<br>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 ① 해양보호구역 면적(km <sup>2</sup> )<br>② 갯벌 면적                     |
|                            | 14.6 |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br>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 ① 전라북도 수산 종자 방류량<br>② 2차 수산업 생산량                             |
|                            | 14.7 |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 ① 조건 불리 수산직불제 수급률(%)   |

| 목표                         | 번호   | 세부목표   | 지표   |
|----------------------------|------|--|--|
| SDGs 15<br>육상<br>생태계<br>보전 |      |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  |
|                            | 15.1 | 육상과 내륙 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 ① 생태습지 지정 비율   |
|                            | 15.2 |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 ① 생태경관보전지역 증가면적 (지정 건수)<br>② 테마임도(산림레포츠, 산림휴양을 위한 임도) 누적 개설 길이 |
|                            | 15.3 | 물, 홍수, 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① 사방(토사 등이 무너져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 면적                           |
|                            | 15.4 |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 ① 전라북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
|                            | 15.5 |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 ① 밀렵 단속 수  |
|                            | 15.6 | 침입외래종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의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① 생태계 교란 동·식물 제거 예산액   |
|                            | 15.7 |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① 생태통로 개설 건수   |
| SDGs 16<br>평화·정의<br>·포용    | 16.1 |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 ① 강력범죄 발생 건수<br>② 아동학대 신고 건수                                   |
|                            | 16.2 | 평등하고 기본적인 인권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에 집중한다                 | ① 인권지수 개선도   |
|                            | 16.3 |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실현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 ① 주민참여 예산액 및 사업 수  |
| SDGs 17<br>지구촌<br>협력 강화    | 17.1 |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 ① 시·군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
|                            | 17.2 | 지속가능한 목표실천을 위한 국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 ① 국내외 지방정부 등과 교류 수   |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라북도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약 2년에 걸쳐

17개 목표, 81개 세부목표, 153개 지표를 만들었다

### Ⅲ. 시범지표 모니터링 결과

J-SDGs 2-2-2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J-SDGs 3-4-1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J-SDGs 5-1-1 지역 성평등 지수

J-SDGs 8-3-1 청년 창업 건수 및 폐업률

J-SDGs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J-SDGs 15-4-1 전라북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 2023년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 사람위원회

##### 농업농촌분과

2-2-2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 사회복지분과

3-4-1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시설 비율

##### 교육성평등분과

5-1-1 지역 성평등 지수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사람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2-2-2.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 총 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30의 17개 목표(Goals) 중 두 번째 목표인 ‘기아종식’은 식량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번째 목표인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도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 및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였다
- 농업·환경·먹거리의 균형발전으로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는데 친환경농업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K-SDGs 2번째 목표인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5개의 세부목표와 11개의 지표를 작성하였다
- SDGs 2번 목표 이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부목표 ‘2-2 친환경 농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의 지표인 ‘2-2-2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17개의 목표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구성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UN-SDGs    | K-SDGs                         | J-SDGs |                       |       |              |
|------------|--------------------------------|--------|-----------------------|-------|--------------|
|            |                                | 세부목표   |                       | 지표    |              |
| 02<br>기아종식 | 02<br>식량안보 및<br>지속가능한<br>농업 강화 | 2-2    | 친환경 농축산업<br>생태계를 조성한다 | 2-2-2 |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

〈표 12〉 UN-SDGs 체계 속의 K-SDGs와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세부목표 '2-2 친환경 농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를 이행하기 위한 지표로 '2-2-2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을 알아보았다
- 2022년 기준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은 5,209.74ha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이는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제도 강화, 판로 부족, 가격경쟁력 심화, 소비자의 관심 감소, 용도변경, 로컬푸드 확산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및 출하량은 계속 감소하는데 반해 친환경인증 축산물 면적 및 출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이는 농산물 소비량보다 육류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축산농가의 대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해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뿐만아니라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면적 및 출하량을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 또한 세부목표 '2-2 친환경 농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을 알아보기 위해 청년농 지원사업 참여 수나 후계농업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 등 필요한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전북도와 농식품인재개발원,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력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  |       |                     |
|-----------|---|--|-------|---------------------|
| <b>목표</b> | <b>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b>  |  |       |                     |
| 세부목표      | 2-2. 친환경 농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  |       |                     |
| 지표명       | 2-2-2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  |       |                     |
| 필요성 및 의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환경·먹거리 균형발전으로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친환경농업의 역할이 중요해짐</li> <li>-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이 필요함에 따라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li> </ul> |  |       |                     |
| 지표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함</li> </ul> </li> <li>▶ 친환경 농산물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농산물의 범위는 국가가 인증하고 있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2종류임</li> <li>- 유기농산물 : 유기농산물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전환기간 : 최초 수확 전 3년)</li> <li>-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농산물은 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li> </ul> </li> <li>▶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li> </ul> </li> </ul> |       |                     |
|           | 산출 논리   | 1. 친환경 인증 농가의 면적을 입력   |       |                     |
|           | 자료원 또는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br>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 산정 방법 | 유기농산물 면적+무농약 농산물 면적 |
|           | 작성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계 수집  |       |                     |

|           |       | (단위 : ha) |       |       |          |        |          |          |          |          |  |
|-----------|-------|-----------|-------|-------|----------|--------|----------|----------|----------|----------|--|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유기농산물 면적  | 1,990 | 1,776.2   | 1,798 | 1,947 | 2,009.4  | 2,125  | 2,283.44 | 2,402.99 | 2,339.66 | 2,471.8  |  |
| 무농약농산물 면적 | 5,328 | 4,519.18  | 4,755 | 4,852 | 4,270.93 | 732.73 | 423.59   | 3,229.75 | 3,019.68 | 2,737.94 |  |
| 저농약농산물 면적 | 1,349 | 884.63    | 331   | 0     | 0        | 0      | 0        | 0        | 0        | 0        |  |
| 친환경농산물 면적 | 8,667 | 7,180.01  | 6,884 | 6,799 | 6,280.35 | 857.75 | 707.03   | 5,632.74 | 5,359.34 | 5,209.74 |  |

〈표 14〉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현황

- 2022년 기준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은 5,209.74ha
  -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은 유기농산물의 면적과 무농약 농산물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의 데이터를 확인함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제도 강화, 판로 부족, 가격경쟁력 심화, 소비자의 관심 감소, 용도변경, 로컬푸드 확산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이사항으로 과거 2015년까지 저농약 농산물도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나 2016년부터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됨

|       |   |          |                                      |
|-------|---|----------|--------------------------------------|
| 기준치   | 2022년 5,209.74ha  | 목표치      | 2030년까지 6,406.54ha                   |
| 자료 경로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인증농산물정보 → 친환경인증통계 | 지표 관리 부서 | - 전라북도 농산유통과<br>- 전북지속협 사람위원회 농업농촌분과 |

〈표 13〉 '2-2-2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1.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가.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한 지표

- 농업·환경·먹거리 균형발전으로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친환경농업의 역할이 중요해짐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이 필요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 (2) 지표의 정의

가. 친환경 농축산물

-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함

나. 친환경 농산물의 범위

- 친환경 농산물의 범위는 국가가 인증하고 있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2종류임

다.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

-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

※ 본 지표의 '친환경 농산물'의 범위

- 유기농산물 : 유기농산물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전환기간 : 최초 수확 전 3년)
-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농산물은 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표 15〉 친환경 농산물의 범위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 수집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라북도 친환경 농수산물 입력

### (4) 지표산출 방법

#### 가.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산식  
= 유기농산물 + 무농약 농산물 (2015년 이전, 저농약 농산물 포함)

〈표 16〉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산식

## 2. 지표 분석 결과

### (1)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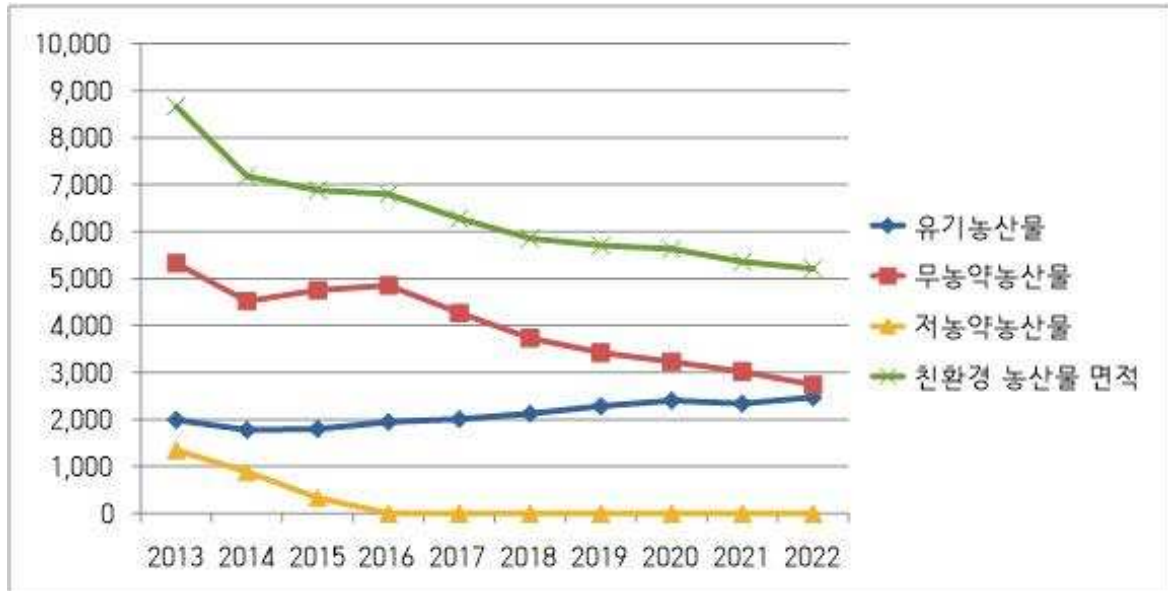
#### 가. 2022년 기준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은 5,209.74ha

-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은 유기농산물의 면적과 무농약 농산물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의 데이터를 확인함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제도 강화, 판로 부족, 가격경쟁력 심화, 소비자의 관심 감소, 용도변경, 로컬푸드 확산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이사항으로 과거 2015년까지 저농약 농산물도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나 2016년부터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됨

(단위 : ha)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유기농산물     | 1,990 | 1,776.2  | 1,798 | 1,947 | 2,009.4 | 2,125   | 2,283.44 | 2,402.99 | 2,339.66 | 2,471.8  |
| 무농약농산물    | 5,328 | 4,519.18 | 4,755 | 4,852 | 4,270.9 | 3,732.7 | 3,423.59 | 3,229.75 | 3,019.68 | 2,737.94 |
| 저농약농산물    | 1,349 | 884.63   | 331   | 0     | 0       | 0       | 0        | 0        | 0        | 0        |
| 친환경농산물 면적 | 8,667 | 7,180.01 | 6,884 | 6,799 | 6,280.3 | 5,857.7 | 5,707.03 | 5,632.74 | 5,359.34 | 5,209.74 |

〈표 9〉 전라북도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그림 32〉 전라북도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 (2) 2030년까지 전라북도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개선 목표

### ○ 기준치

- 최근 전라북도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인 2022년을 기준으로 함
- (기준) 2022년 전라북도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 5,209.74ha

### ○ 목표치

- 2022년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이 5,209.74ha로 2021년 대비 -149.6ha이 감소함. 이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149.6ha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함
- (목표) 2030년 전라북도 친환경인증 농산물 면적 : 6,406.54ha

### ◆ 용어 정의

#### 친환경 농축산물

-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함

### 3-4-1.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시설 비율

## 총 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30의 17개 목표(Goals) 중 세 번째 목표인 ‘건강과 웰빙’은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정되었다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3번째 목표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도 모든 연령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며, 교통사고 등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노력을 하기위해 목표를 설정하였다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접근·이용·이동의 편의 제공 수준을 파악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K-SDGs 3번째 목표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7개의 세부목표와 12개의 지표를 작성하였다
- SDGs 3번 목표 이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부목표 ‘3-4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이동권을 보장한다’의 지표인 ‘3-4-1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17개의 목표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구성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UN-SDGs      | K-SDGs                    | J-SDGs |                          |       |                                  |
|--------------|---------------------------|--------|--------------------------|-------|----------------------------------|
|              |                           | 세부목표   |                          | 지표    |                                  |
| 03<br>건강과 웰빙 | 03<br>건강하고<br>행복한 삶<br>보장 | 3-4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br>이동권을 보장한다 | 3-4-1 |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br>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br>율 |

〈표 18〉 UN-SDGs 체계 속의 K-SDGs와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세부목표 ‘3-4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이동권을 보장한다’를 이행하기 위한 지표로 ‘3-4-1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을 알아보았다
- 2021년 기준, 전라북도 내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문화기반시설은 19개, 문화기반 시설 대비 배리어프리 인증 비율은 10.56%였다
-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북도 내 배리어프리 인증 문화기반시설 수가 2017년 이전에는 0개로 전국 최하위권이었으나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지표 통계를 조사한 통계청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개수 및 비율의 값이 달라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 그래서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기준으로 전체 문화기반시설 수를 파악하였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수를 입력하여 전라북도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수를 산출했다

※ 지표 산출식 : (배리어프리 인증 문화기반시설 수 /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합계) X 100

- 앞으로도 이 지표 산출은 자체 조사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           |   |  |  |
|-----------|---|--|--|
| <b>목표</b> | <b>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b>   |  |  |
| 세부목표      | 3-4.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이동권을 보장한다  |  |  |
| 지표명       | 3-4-1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  |  |
| 필요성 및 의의  | <p>▶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접근·이용·이동의 편의 제공 수준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조치임.</li> <li>- 전체 문화기반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신체적·정신적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들의 문화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파악함</li> </ul> |  |  |
| 지표        | 정의  | <p>▶ 문화기반시설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반시설의 범위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기준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및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보급·전수시설을 포함함</li> <li>- 문화기반시설 범위는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문화보급·전수시설로 함</li> </ul> <p>▶ 배리어프리 인증 문화기반시설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 내 전체 문화기반시설 대비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의 비율을 지칭함</li> <li>-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시설을 의미함</li> </ul> |  |
|           | 산출 논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기준으로 전체 문화기반시설 수 입력</li> <li>2.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수 입력</li> <li>3. 전라북도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산출</li> </ol>   |  |
| 자료원 또는 출처 |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한국장애인개발원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수  | 산정 방법  | (배리어프리 인증 문화기반시설 개수 /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합계) X 100 |
| 작성 방법     |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한국장애인개발원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수를 통해 통계 수집  |  |  |

|       |  | (단위 : 개, %)  |                |                                      |      |      |       |
|-------|--|--|----------------|--------------------------------------|------|------|-------|
|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 문화기반시설 개수  | 161            | 158                                  | 174  | 180  | 180   |
|       |  | 배리어프리 인증 문화기반시설 개수   | 1              | 3                                    | 5    | 15   | 19    |
|       |  | 배리어프리 인증 문화기반시설 비율(%)  | 0.62           | 1.9                                  | 2.87 | 8.33 | 10.56 |
|       |  | <p>〈표 20〉 전라북도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개수 및 비율</p> <p>○ 2021년 기준, 전라북도 내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문화기반시설은 19개, 문화기반시설 대비 배리어프리 인증 비율은 10.56%</p> <p>- 전북도 내 배리어프리 인증 문화기반시설 수는 2017년 이전에는 0개, 2017년부터는 1개로 전국 최하위권이었으나, 2021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p> <p>-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5년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고, 2019년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프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임</p> <p>- 특이사항으로는 2018년 문화기반시설 수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배리어프리 인증 문화기반시설은 오히려 증가함</p> |                |                                      |      |      |       |
| 현황    |  |  |                |                                      |      |      |       |
| 기준치   | 2021년 10.56%   | 목표치  | 2030년까지 30.63% |                                      |      |      |       |
| 자료 경로 | 1. 통계청(www.kosis.kr) → 지역 문화현황통계 →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 비율<br>2.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 문화예술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br>3.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인증실적 현황 |  | 지표 관리 부서       |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br>- 전북지속협 사람위원회 사회복지분과 |      |      |       |

〈표 19〉 ‘3-4-1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1.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접근·이용·이동의 편의 제공 수준 파악
-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조치임
  - 전체 문화기반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신체적·정신적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들의 문화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파악함

### (2) 지표의 정의

- 가. 문화기반시설의 범위
- 문화기반시설의 범위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기준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및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보급·전수시설을 포함함
  - 문화기반시설 범위는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지표와 동일함

※ 본 지표의 ‘문화기반시설’ 범위  
=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 문화보급·전수시설

〈표 21〉 문화기반시설 범위

### 나. 배리어프리 인증 문화기반시설 비율

- 전체 문화기반시설 대비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의 비율을 지칭함
-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시설을 의미함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 수집 방법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기준으로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수 입력



#### (4) 지표산출 방법

- 가. 전체 문화기반시설 대비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산식  
 = (배리어프리 인증 문화기반시설 개수 /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합계) X 100

〈표 22〉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산식

## 2. 지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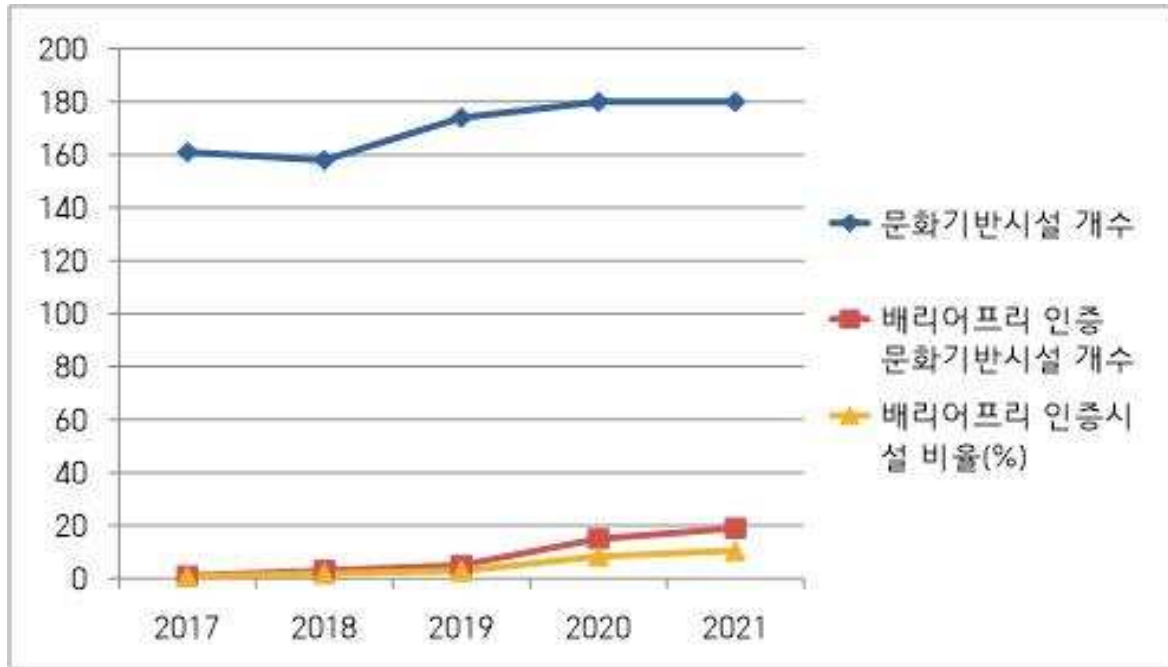
### (1)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 가. 2021년 기준, 전라북도 내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문화기반시설은 19개, 문화기반시설 대비 배리어프리 인증 비율은 10.56%
- 전북도 내 배리어프리 인증 문화기반시설 수는 2017년 이전에는 0개, 2017년부터는 1개로 전국 최하위권이었으나, 2021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고, 2019년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프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임
  - 특이사항으로는 2018년 문화기반시설 수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배리어프리 인증 문화기반시설은 오히려 증가함

(단위 : 개,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전체 문화기반시설 개수          | 161  | 158  | 174  | 180  | 180   |
| 배리어프리 인증 문화기반시설 개수    | 1    | 3    | 5    | 15   | 19    |
| 배리어프리 인증 문화기반시설 비율(%) | 0.62 | 1.9  | 2.87 | 8.33 | 10.56 |

〈표 23〉 전라북도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개수 및 비율



〈그림 33〉 전라북도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개수 및 비율

## (2) 2030년까지 전라북도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개선 목표

### ○ 기준치

- 최근 전라북도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인 2021년을 기준으로 함
- (기준) 2021년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 10.56%

### ○ 목표치

- 2021년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이 2020년 대비 2.23% 증가함. 이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2.23%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함
- (목표)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 30.63%

## ◆ 용어 정의

### 배리어프리(Barrier Free)

- 1974년 유엔 장애인 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생긴 개념으로, 원래는 건물이나 거주환경에서 층을 없애는 등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물리적인 장애(배리어)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건축학계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 주택이나 도로 등에서의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자격과 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장벽,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커뮤니케이션의 문화정보 전달장벽, 차별과 편견 그리고 장애인 자신의 의식상 장벽까지 제거하자는 움직임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적용 대상도 장애인에서부터 고령자(노인), 임산부 등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 5-1-1. 지역 성평등 지수

### 총 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30의 17개 목표(Goals) 중 다섯 번째 목표인 ‘성평등 보장’은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을 위해 설정되었다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5번째 목표인 ‘성평등 보장’도 모든 차별 및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을 철폐하고 돌봄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며 여성의 리더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였다
-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시·군의 성평등 지수를 알아보고 성평등 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K-SDGs 5번째 목표인 ‘성평등 보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5개의 세부목표와 9개의 지표를 작성하였다
- SDGs 5번 목표 이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부목표 ‘5-1 성평등 포용 사회를 실현한다’의 지표인 ‘5-1-1 지역 성평등 지수’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17개의 목표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구성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UN-SDGs      | K-SDGs       | J-SDGs |                |       |           |
|--------------|--------------|--------|----------------|-------|-----------|
|              |              | 세부목표   |                | 지표    |           |
| 05<br>성평등 보장 | 05<br>성평등 보장 | 5-1    | 성평등 포용사회를 실현한다 | 5-1-1 | 지역 성평등 지수 |

〈표 16〉 UN-SDGs 체계 속의 K-SDGs와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세부목표 '5-1 성평등 포용 사회를 실현한다'를 이행하기 위한 지표로 '5-1-1 지역 성평등 지수'을 알아보았다
- 2021년 기준, 전라북도의 지역 성평등 지수 종합등급은 하위권으로 2020년 중하위권에서 1단계 하락하였다
- 2016년에는 성평등 상위지역이었던 전라북도가 2021년에는 하위권으로 떨어진 이유는 8개 분야 중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경제활동 분야가 유일하며 하위권에 속하는 분야는 교육·직업훈련과 복지분야다
- 전년 대비 등급 하락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비록 경제활동 및 문화·정보 분야는 성평등 순위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복지, 보건, 안전 분야가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종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전년 대비하여 보건 분야의 성평등 하락 폭이 크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지표의 하락에 따라 하위권에 위치하게 되었다
- 경제활동과 문화·정보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다소 개선되었으며, 하위권 분야 중 복지 분야는 중장기 계획하에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평등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 목표       |   | 5. 성평등 보장   |          |  |
|----------|---|---|----------|--|
| 세부목표     | 5-1. 성평등 포용 사회를 실현한다  |   |          |  |
| 지표명      | 5-1-1 지역 성평등 지수   |   |          |  |
| 필요성 및 의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시군의 성평등 지수를 알아보고 성평등 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li> <li>-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li> <li>- 지역별·영역별·분야별 성평등 수준 비교를 통해 성평등 수준이 취약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성평등 촉진</li> <li>- 양성평등 정책의 모니터링, 지역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국민의 인식 제고</li> </ul> |   |          |  |
| 지표       | 정의  | <p>▶성평등 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1항). 성평등지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성 평등을 개선 시키고자 하는 정책 도구입니다</li> </ul> <p>▶ 지역 성평등 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개발된지수로,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 된 값입니다</li> </ul> |          |  |
|          | 산출 논리   | -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3항에 의해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분야와 지표가 구성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가 구성됨   |          |  |
|          | 자료원 또는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br>성인지통계 시스템  | 산정<br>방법 | 1단계 : 지표의 표준화와 성비로 전환<br>2단계 : 지표별 성비를 대상 인구조 조정<br>3단계 : 분야별 지수 값 산정<br>4단계 : 지역 성평등지수 산정 |

작성  
방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시스템을 통해 통계 수집

현황

**1. 전라북도 지역 성평등 지수 수준(통계생산 연도기준)**

- 2016년 : 4위 / 성평등 상위지역
- 2017년 : 3위 / 성평등 상위 지역
- 2018년 : 12위 / 성평등 중하위 지역
- 2019년 : 12위 / 성평등 중하위 지역
- 2020년 : 13위 / 성평등 중하위 지역
- 2021년 : 16위 / 성평등 하위 지역

**2. 전라북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 연도       | 종합순위   | 성평등한 사회참여 |    | 여성의 인권·복지 |     | 성평등 의식·문화 |    |
|----------|--------|-----------|----|-----------|-----|-----------|----|
|          |        | 점수        | 순위 | 점수        | 순위  | 점수        | 순위 |
| 2016     | 상위권    | 62.9      | 12 | 91.9      | 1   | 72.1      | 8  |
| 2017     | 상위권    | 64.3      | 12 | 91.2      | 1   | 72.2      | 13 |
| 2018     | 중하위권   | 66.2      | 12 | 89.2      | 1   | 70.5      | 16 |
| 2019     | 중하위권   | 67.9      | 11 | 87.9      | 5   | 71.4      | 17 |
| 2020     | 중하위권   | 67.6      | 14 | 87.1      | 8   | 73.7      | 14 |
| 2021     | 하위권    | 68.7      | 13 | 83.4      | 17  | 74.9      | 11 |
| 2020년 대비 | 1단계 하락 | 1.1       | 1  | -3.7      | -9  | 1.2       | 3  |
| 2016년 대비 | 3단계 하락 | 5.8       | -1 | -8.5      | -16 | 2.8       | -3 |

〈표 26〉 전라북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전라북도 종합등급은 2021년 하위권으로 2020년 중하위권에서 1단계 하락함
  - 분야 중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경제활동 분야가 유일하며 하위권에 속하는 분야는 교육·직업훈련과 복지 분야임
  - 특히, 하위권 분야 중 복지 분야는 중장기 계획하에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표별로는 2021년 기준 성평등 점수가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는 관리자 비율 및 가사노동시간과 30점 미만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육아휴직자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

|          |  |                |  |
|----------|--|----------------|--|
|          | 안이 필요함<br>-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평등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임 |                |  |
| 기준치      | 2021년 종합점수 75.66점  | 목표치            | 2030년까지 종합점수 78.36점                      |
| 자료<br>경로 |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시스템(gsis.kwdi.re.kr) → 주요통계 → 성평등지수 → 지역 성평등지수      | 지표<br>관리<br>부서 | - 전라북도 여성가족과<br>- 전북지속협 사람위원회<br>교육성평등분과 |

〈표 25〉 '5-1-1 지역 성평등 지수'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1.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가. 지역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한 지표

-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시군의 성평등 지수를 알아보고 성평등 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
- 지역별·영역별·분야별 성평등 수준 비교를 통해 성평등 수준이 취약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성평등 촉진
- 양성평등 정책의 모니터링, 지역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국민의 인식 제고

### (2) 지표의 정의

#### 가. 성평등 지수

-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1항). 성평등지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성평등을 개선 시키고자 하는 정책 도구임

#### 나. 지역 성평등 지수

-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개발된 지수로, 국가 성평등 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 된 값

※ 본 지표의 '지역 성평등 지수'의 범위

- 성평등한 사회참여 :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 여성의 인권·복지 : 복지, 보건, 안전
- 성평등 의식·문화 : 가족, 문화·정보

〈표 27〉 지역 성평등 지수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 수집 방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시스템에서 지역 성평등 지수보고서로 확인

### (4) 지표산출 방법

#### 가. 지역 성평등 지수

- 지역 성평등 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3항에 의해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분야와 지표가 구성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가 구성됨

※ 지역 성평등 지수 산식

- 1단계 : 지표의 표준화와 성비로 전환
- 2단계 : 지표별 성비를 대상 인구로 조정
- 3단계 : 분야별 지수 값 산정
- 4단계 : 지역 성평등지수 산정

〈표 28〉 지역 성평등 지수 산식

## 2. 지표 분석 결과

### (1) 지역 성평등 지수

가. 지역 성평등 지수의 분야별 지표

| 정책영역       | 분야          | 지표                |
|------------|-------------|-------------------|
| 성평등한 사회참여  | 경제활동        |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
|            |             | 성별 임금격차           |
|            |             | 상용근로자 비율          |
|            | 의사결정        |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
|            |             |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            |             | 관리직 비율            |
|            |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
|            | 교육·직업<br>훈련 | 평균 교육연수           |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                   |
| 여성의 인권·복지  | 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            |             |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
|            | 보건          |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
|            |             | 건강검진수검률           |
|            |             | 스트레스 인지율          |
|            | 안전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            |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
| 성평등 의식·문화  | 가족          | 가사노동시간            |
|            |             |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
|            |             | 가족관계 만족도          |
|            |             | 육아휴직자             |
|            | 문화·정보       | 여가시간              |
|            |             | 여가만족도             |
|            |             | 인터넷 이용률           |

〈표 29〉 지역 성평등 지수의 분야별 지표

나. 지역별 지역 성평등 지수 수준(통계생산 연도기준)

| 등급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성평등<br>상위지역   | 광주   | 대구   | 대구   | 광주   | 대구   | 대전   |
|               | 대전   | 대전   | 부산   | 대구   | 대전   | 부산   |
|               | 부산   | 전북   | 서울   | 대전   | 부산   | 서울   |
|               | 전북   | 제주   | 제주   | 부산   | 서울   | 세종   |
|               | -    | -    | -    | 제주   | 제주   | 제주   |
| 성평등<br>중상위 지역 | 강원   | 광주   | 경기   | 경기   | 광주   | 광주   |
|               | 인천   | 부산   | 대전   | 서울   | 경기   | 경기   |
|               | 전남   | 서울   | 울산   | 세종   | 세종   | 대구   |
|               | 충북   | 인천   | 충북   | 인천   | 울산   | 울산   |
| 성평등<br>중하위 지역 | 경기   | 강원   | 강원   | 강원   | 강원   | 강원   |
|               | 인천   | 경기   | 광주   | 울산   | 경남   | 경남   |
|               | 전남   | 울산   | 인천   | 전북   | 인천   | 인천   |
|               | 충북   | 충북   | 전북   | 충북   | 전북   | 충북   |
| 성평등<br>하위지역   | 경남   | 경남   | 경남   | 경남   | 경북   | 경북   |
|               | 경북   | 경북   | 경북   | 경북   | 전남   | 전남   |
|               | 울산   | 전남   | 전남   | 전남   | 충북   | 전북   |
|               | 충남   | 충남   | 충남   | 충남   | 충남   | 충남   |

〈표 30〉 지역별 지역 성평등 지수 수준

- 2016년 : 4위 / 성평등 상위지역
- 2017년 : 3위 / 성평등 상위 지역
- 2018년 : 12위 / 성평등 중하위 지역
- 2019년 : 12위 / 성평등 중하위 지역
- 2020년 : 13위 / 성평등 중하위 지역
- 2021년 : 16위 / 성평등 하위 지역

다. 전라북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 연도       | 종합순위   | 성평등한 사회참여 |    | 여성의 인권·복지 |     | 성평등 의식·문화 |    |
|----------|--------|-----------|----|-----------|-----|-----------|----|
|          |        | 점수        | 순위 | 점수        | 순위  | 점수        | 순위 |
| 2016     | 상위권    | 62.9      | 12 | 91.9      | 1   | 72.1      | 8  |
| 2017     | 상위권    | 64.3      | 12 | 91.2      | 1   | 72.2      | 13 |
| 2018     | 중하위권   | 66.2      | 12 | 89.2      | 1   | 70.5      | 16 |
| 2019     | 중하위권   | 67.9      | 11 | 87.9      | 5   | 71.4      | 17 |
| 2020     | 중하위권   | 67.6      | 14 | 87.1      | 8   | 73.7      | 14 |
| 2021     | 하위권    | 68.7      | 13 | 83.4      | 17  | 74.9      | 11 |
| 2020년 대비 | 1단계 하락 | 1.1       | 1  | -3.7      | -9  | 1.2       | 3  |
| 2016년 대비 | 3단계 하락 | 5.8       | -1 | -8.5      | -16 | 2.8       | -3 |

〈표 31〉 전라북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라. 전라북도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구분                  |      | 내용  |   |
|---------------------|------|---|---|
| 성평등<br>순위           | 종합등급 | 2019년 중하위권 → 2020년 중하위권 → 2021년 하위권   |   |
|                     | 분야   | 상위  | 경제활동  |
|                     |      | 하위  | 교육·직업훈련, 복지   |
|                     | 지표   | 상위  | 성별 임금격차,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 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사노동 시간 |
| 하위                  |      |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교육연수,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육아휴직자, 인터넷 이용률  |   |
|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 대비 보건 분야의 성평등 하락 폭이 크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지표의 하락에 따라 하위권에 위치함.</li> <li>- 경제활동과 문화·정보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다소 개선</li> </ul> |   |
|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br>-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   |
|                     |      |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br>-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육아휴직자   |   |
|                     |      |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br>-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   |

〈표 32〉 전라북도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전라북도 종합등급은 2021년 하위권으로 2020년 중하위권에서 1단계 하락함
  - 분야 중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경제활동 분야가 유일하며 하위권에 속하는 분야는 교육·직업훈련과 복지 분야임
  - 전년 대비 등급 하락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비록 경제활동 및 문화·정보 분야는 성평등 순위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복지, 보건, 안전 분야가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종합 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하위권 분야 중 복지 분야는 중장기 계획하에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표별로는 2021년 기준 성평등 점수가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는 관리자 비율 및 가사노동시간과 30점 미만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육아휴직자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평등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임

## (2) 2030년까지 전라북도 성평등 지수 개선 목표

### ○ 기준치

- 최근 전라북도 성평등 지수인 2021년을 기준으로 함
- (기준) 2021년 지역별 성평등 종합점수 : 75.66점(하위권)

### ○ 목표치

- 2021년 평균 지역 성평등 종합점수가 77.1점으로 2020년 대비 +0.3점 증가함. 이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0.3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함
- (목표) 지역 성평등 종합점수 : 78.36점(중상위권)





## 2023년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 경제위원회

##### 8-3-1 청년 창업 건수 및 폐업률(%)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경제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8-3-1. 청년 창업 건수 및 폐업률(%)

#### 총 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30의 17개 목표(Goals) 중 여덟 번째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8번째 목표인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근로자 권익보호 등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담고 있다
- 전라북도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경제성장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라북도 청년 창업 환경이 청년 친화적인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전라북도 청년 창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 확보가 내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자 함
- 장기적으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 UN-SDGs                | J-SDGs                              |       |                   |
|------------------------|-------------------------------------|-------|-------------------|
|                        | 세부목표                                | 지표    |                   |
| 08<br>양질의 일자리와<br>경제성장 | 8-3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 실업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 8-3-1 | 청년 창업 건수 및 폐업률(%) |

〈표 33〉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세부목표 '8-3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 실업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를 이행하기 위한 지표로 '8-3-1 청년 창업 건수 및 폐업률'을 알아보았다
- 청년 창업 건수는 분석 시점 기준 신규 창업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를 모두 포함하여 총량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 청년 폐업률은 전체 창업 건수 대비 해당 연도에 폐업한 비율로 알아보았다
- 보조지표인 청년 창업률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 인구 대비 청년 창업 비율을 계산하였다
- 존속 연수별 폐업률은 존속 연수별 폐업률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알아보았다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시범지표 및 보조지표의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아니고 통계청 데이터센터에서 승인 과정을 거쳐 외부로 반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통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 통계청에서 직접 발표하는 자료가 아니고 통계센터에 방문하여 통계자료를 추출하는 작업이 요구되기에 일반적인 공무원이 지표 관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통계 전문가를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통계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경제 동향 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통계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라북도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취합·정리하여 분기마다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있으며, 전북 만의 통계 지표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 따라서 전라북도는 전북연구원이 청년 창업 지표를 관리하도록 지원 요청하고 전북연구원으로부터 지표를 제공받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청년 창업 지표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제조업과 IT분야 창업에 대한 지표를 추가 보강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청년들의 대표적인 창업 업종은 소매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분야로 청년 창

업을 통한 추가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IT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연령별(청년 vs 다른 연령), 지역별(전북 vs 타 시도) 폐업 사유에 대한 지표를 추가 보강할 필요가 있다
  - 창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라북도 창업생태계에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여 폐업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폐업 사유에 대해 다른 변수들 간의 교차 분석이 필요하다

|                 |   |  |  |
|-----------------|---|--|--|
| <b>목표</b>       | <b>8.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b>  |  |  |
| <b>세부목표</b>     | 8-3.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 실업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  |  |
| <b>지표명</b>      | 8-3-1 청년 창업 건수(전체 청년 창업 건수 및 인구 대비 청년 창업 비율) 및 폐업률(전체 청년 창업 건수 대비 당해연도 폐업 비율, 존속 연수별 폐업 비율)   |  |  |
| <b>필요성 및 의의</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의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유출을 막고 전북 정주화가 필요함</li> <li>- 이를 위해서는 청년의 성공적 창업이 하나의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음</li> </ul> |  |  |
| <b>지표</b>       | <b>정의</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또는 폐업 대표자 기준으로 만 19세~39세의 창업과 폐업 현황을 분석함.</li> <li>- 전국과 전북지역의 인구 대비 창업 참여율을 비교 평가하여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여부를 평가</li> <li>- 전국과 전북지역의 존속 연수별 폐업률을 비교 평가하여 창업 활동의 지속성을 평가</li> </ul> |  |
|                 | <b>산출 논리</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에서 청년 창업 관련 통계 지표를 시도 단위로 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통계청 데이터센터에서 추출이 가능한 자료임</li> <li>- 통계청 데이터센터에서 추출하기 위해서는 통계 관련 전문 조직을 두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요구됨</li> </ul>                        |  |
|                 | <b>자료원 또는 출처</b>  | 기업통계등록부(SBR)   | 산정 방법<br>$\frac{\text{청년 창업 건수}}{\text{청년 인구}} \times 100(\%)$ $\frac{\text{폐업 건수}}{\text{가동사업체 수} + \text{폐업 건수}} \times 100(\%)$ |
| <b>작성 방법</b>    | 통계청의 창업 데이터,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통계 및 기타 통계를 결합  |  |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전북 | 42,150 | 42,651 | 43,633 | 44,801 | 46,080 |
| 전남 | 41,311 | 41,335 | 42,401 | 43,902 | 44,647 |
| 총북 | 35,357 | 36,789 | 38,337 | 40,667 | 42,766 |

〈표 35〉 청년 창업 건수

- 가장 최근 산출치는 46,080건으로 연평균 2.3%씩 증가
-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남은 연평균 2.0%, 충북은 4.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전북 | 9.9%  | 10.4% | 10.9% | 11.5% | 12.3% |
| 전국 | 9.4%  | 9.9%  | 10.7% | 11.7% | 12.6% |

〈표 36〉 청년 창업률

- 가장 최근 산출치는 12.3%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2020년까지는 상회하였으나 이후에 역전

현황

| 구분 | 전라북도 |       |       |       | 전국   |       |       |       |
|----|------|-------|-------|-------|------|-------|-------|-------|
|    | 전체   | 20대   | 30대   | 청년    | 전체   | 20대   | 30대   | 청년    |
| 폐업 | 7.9% | 16.9% | 11.0% | 12.6% | 8.2% | 17.8% | 11.6% | 13.2% |

〈표 37〉 청년 폐업률

- 전북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의 폐업률은 전국 평균 청년 폐업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됨

| 구분    | 6개월 미만 | 6개월 ~1년 | 1년 ~2년 | 2년 ~5년 | 5년 ~10년 | 10년 ~15년 | 15년 이상 |
|-------|--------|---------|--------|--------|---------|----------|--------|
| 전북 평균 | 12.4%  | 13.8%   | 11.4%  | 8.9%   | 5.9%    | 4.0%     | 3.4%   |
| 전북 청년 | 19.3%  | 17.0%   | 15.7%  | 11.9%  | 7.9%    | 6.5%     | 1.6%   |

〈표 38〉 존속 연수별 폐업률

|       |  |          |  |
|-------|--|----------|--|
|       | - 전북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의 존속 연수별 폐업률은 전반적으로 전북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  |
| 기준치   | <b>&lt;청년 창업 건수&gt;</b><br>46,080 (2022년 기준)<br><b>&lt;청년 폐업률&gt;</b><br>12.6% (2022년 기준)<br><b>&lt;청년 창업률&gt;</b><br>12.3% (2022년 기준)<br><b>&lt;존속 연수별 폐업률&gt;</b><br>2년 이내 폐업률 52% | 목표치      | <b>&lt;청년 창업 건수&gt;</b><br>2030년까지 57,026건 달성<br><b>&lt;청년 폐업률&gt;</b><br>전국 평균 하회<br><b>&lt;청년 창업률&gt;</b><br>전국 평균 상회<br><b>&lt;존속 연수별 폐업률&gt;</b><br>2년 이내 폐업률 50% 이내 |
| 자료 경로 | 통계데이터전북센터(통계청) 이용 신청 → 센터 승인 → 방문 후 자료 추출 → 추출 자료 사전 검토 → 반출 데이터 심의(화, 목) → 심의 이후 데이터 반출 허가(센터 홈페이지)   | 지표 관리 부서 | - 전라북도 청년정책과, 창업지원과<br>- 전북지속협 경제위원회   |

〈표 34〉 ‘8-3-1 청년 창업 건수 및 폐업률(%)’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1.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가.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지표

-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지만, 청년만의 진취성이나 아이디어 활용성 등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경제성장 및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청년들이 다른 세대 및 다른 지역 청년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창업에 적극적인지, 창업 환경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전라북도 관점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내재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창업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단순히 창업 건수만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폐업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창업 건수뿐만 아니라 폐업 관련 지표도 같이 모니터링하여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 (2) 지표의 정의

#### 가. 청년 창업 건수

- 창업 건수는 해당 연도 신규 창업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도 포함하는 지표로 신규 창업 건수만을 고려할 경우, 시계열적인 변화가 불규칙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와 비슷한 통계 지표로 경제활동인구나 고용자 수와 같이 총량적인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창업 관련 지표도 신규 창업을 포함한 총량적인 지표로 사용함.



## 나. 청년 폐업률

- 폐업률은 전체 창업 건수 대비 해당 연도에 폐업한 비율을 의미하며, 폐업률이 낮을수록 창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건전한 지역경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 청년 창업률(보조지표)

- 다른 지역과 비교할 경우, 인구 규모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인구 대비 청년 창업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이와 비슷한 통계 지표로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고용률이 있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 시 해당 지표를 사용함
- 전라북도의 창업 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청년 창업 건수를 사용하되, 다른 지역과의 비교 시에는 보조지표인 청년창업률을 사용함

## 라. 존속 연수별 폐업률(보조지표)

- 일반적으로 창업 후 1~3년 차가 창업 Death Valley라고 불리는데, 이 시기를 잘 지나야 창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이에, 이 시기에 창업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존속 연수별 폐업률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특정 시점의 폐업률이 높을 경우 정책에 대한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기업통계등록부(SBR) 제공 데이터 취득 방법

- 데이터 이용 방법 : 통계데이터센터(통계청) 이용 신청 → 센터 승인 → 방문 후 자료 추출 → 추출 자료 사전 검토 → 반출 데이터 심의(화, 목) → 심의 이후 데이터 반출 허가(센터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사업체 수 기준 데이터 작성이 필요 / 사업체 3개 미만 항목에 대해서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

## 나. 기업통계등록부(SBR) 제공 데이터 개요

- 지역구분 : 개별 사업체 주소(POI) → 읍·면·동/시·군·구/시·도 추출
- 제공시기 : 연간/분기/월간
- 제공기준 : 대표자 기준/사업자등록 기준
- 사업자구분 : 개인, 법인, 회사 이외 법인, 비법인단체, 국가지방단체, 공공기관
- 성별구분 : 남성, 여성, 미상
- 연령구분 : 사업체 대표자 나이 (20대, 30대, 청년 구분 가능)
- 존속연수 : 개업 일자, 폐업 일자
  - ※폐업 일자에서 개업 일자를 뺀 연수로 폐업 시 존속 연수 계산 / 존속 연수별 폐업을 계산 가능
- 폐업사유 :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양도·양수, 해산·합병 등 개별 폐업 사유 기재
- 산업분류 : 산업분류코드 - 세세 분류
- 기업규모 : 상출기업, 기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업규모 판정 제외 사업자
- 기업정보 : 매출액, 종사자,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
- 성별, 연령별, 업태별, 존속 연수 등 데이터 항목 간 교차 분석 가능
  - ※연령대, 산업분류, 지역 단위 등 취합된 데이터 형태로 가공·반출이 유리

## (4) 지표산출 방법

### 가. 청년 폐업률

- 청년 폐업률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 청년 폐업률 산식} = \frac{\text{폐업건수}}{\text{가동사업체수} + \text{폐업건수}} \times 100(\%)$$

〈표 39〉 청년 폐업률 산식

## 나. 청년 창업률(보조지표)

- 청년 창업률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 청년 창업률 산식} = \frac{\text{청년 창업 건수}}{\text{청년 인구}} \times 100(\%)$$

〈표 40〉 청년 창업률 산식

## 2. 지표 분석 결과

### (1) 청년 창업 건수 및 창업 참여율

- 2023년 7월 기준 창업 건수는 326,585건이며, 이 중 청년 창업 건수는 46,716건임
- 인근 도 단위 지역과 비교하였을 경우, 인구 규모가 비슷한 충북과 전남에 비해 청년 창업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인구 대비 창업 비율인 청년 창업 참여율은 전북이 12.7%로 전국 평균인 13.0%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지만, 충북, 경북, 경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청년 창업 환경이 좋은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전국 평균인 13.0% 수준까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구분 | 총 창업자 수   |         |           |           | 창업 참여율 |      |       |       |
|----|-----------|---------|-----------|-----------|--------|------|-------|-------|
|    | 전체        | 20대     | 30대       | 청년        | 전체     | 20대  | 30대   | 청년    |
| 전북 | 326,585   | 12,405  | 34,311    | 46,716    | 18.5%  | 6.4% | 19.7% | 12.7% |
| 충북 | 285,335   | 11,238  | 32,355    | 43,593    | 17.9%  | 6.1% | 17.3% | 11.7% |
| 전남 | 336,768   | 11,695  | 33,231    | 44,926    | 18.6%  | 6.5% | 19.5% | 12.8% |
| 경북 | 447,095   | 15,013  | 46,831    | 61,844    | 17.4%  | 6.0% | 17.8% | 12.0% |
| 경남 | 552,076   | 18,607  | 62,087    | 80,694    | 16.9%  | 5.7% | 17.5% | 11.8% |
| 전국 | 9,908,171 | 393,627 | 1,281,601 | 1,675,228 | 19.3%  | 6.3% | 19.5% | 13.0% |

〈표 41〉 총 창업 건수 및 창업 참여율(2023년 7월 기준)

## (2) 폐업률 및 존속 연수별 폐업률

- 2022년 기준 전라북도 폐업률은 7.9%이고 청년 폐업률은 12.6%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청년 폐업률이 전체 폐업률에 비해 높다는 점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준비율이 낮을 수도 있고 좀 더 진취적인 창업 아이템에 대한 낮은 시장 수용성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대한 분석은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존속 연수별 폐업률 추이를 보면 존속 연수가 높아질수록 폐업률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년 이내에 50% 가까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빠른 시점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창업 초기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 지속성을 높여야 함.

| 구분 | 전라북도 |       |       |       | 전국   |       |       |       |
|----|------|-------|-------|-------|------|-------|-------|-------|
|    | 전체   | 20대   | 30대   | 청년    | 전체   | 20대   | 30대   | 청년    |
| 폐업 | 7.9% | 16.9% | 11.0% | 12.6% | 8.2% | 17.8% | 11.6% | 13.2% |

〈표 42〉 폐업률(2022년) : 폐업 건수 / (가동사업체 수 + 폐업 건수)

| 구분        | 전라북도  |       |       |       |
|-----------|-------|-------|-------|-------|
|           | 전체    | 20대   | 30대   | 청년    |
| 전체        | 7.9%  | 16.9% | 11.0% | 12.6% |
| 6개월 미만    | 12.4% | 23.5% | 16.5% | 19.3% |
| 6개월 ~ 1년  | 13.8% | 21.4% | 14.3% | 17.0% |
| 1년 ~ 2년   | 11.4% | 19.4% | 13.9% | 15.7% |
| 2년 ~ 5년   | 8.9%  | 14.2% | 11.3% | 11.9% |
| 5년 ~ 10년  | 5.9%  | 9.2%  | 7.8%  | 7.9%  |
| 10년 ~ 15년 | 4.0%  | 3.9%  | 6.6%  | 6.5%  |
| 15년 이상    | 3.4%  | 2.4%  | 1.5%  | 1.6%  |

〈표 43〉 존속 연수별 폐업률(2022년) : 폐업 건수 / (가동사업체 수 + 폐업 건수)

### (3)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전북 청년 창업과 관련하여 시기별 추이를 분석할 수 있고 타 시도와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
  - 지금까지 창업 관련 통계에서 청년 만을 분리하여 지표를 분석하지 못해서 청년 창업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였으나, 이번 지표 개발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청년 창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북 청년 창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 일자리정책에서 창업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정책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시사점 도출이 가능함
  -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이었던 국내 경제 구조에서 기업 유치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으나, 점점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업 유치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창업 활성화 및 지원이 지역 경제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됨
- 전북 청년 창업율이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역전되었다는 점에서 창업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청년 유출 심화로 청년 수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전북 청년 창업율이 올라갔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창업 건수와 같이 지표 분석이 필요함
- 사회초년생인 청년 입장에서 여러 조건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청년 폐업률이 높다라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전국 평균 청년폐업률보다는 낮다는 점은 고무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어떠한 요인이 폐업으로 연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찾는 것이 필요함

#### (4) 2030년까지 청년 창업 건수 및 폐업률 개선 목표

##### ○ 기준치

- 최근 청년 창업 건수, 청년 창업률, 청년 폐업률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하고, 존속 연수별 폐업률은 2년 이내 폐업률 52%를 기준으로 함
- (기준) 2022년 청년 창업 건수 : 46,080건  
(기준) 2022년 청년 폐업률 : 12.6%  
(보조지표 기준) 2022년 청년 창업률 : 12.3%  
(보조지표 기준) 존속 연수별 폐업률 : 2년 이내 폐업률 52%

##### ○ 목표치

- 전라북도 청년 창업률 데이터상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2.3% 정도 임. 전국 평균은 2.7% 정도가 증가하였고 전국 수준만큼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목표치도 2030년까지 57,026건 달성해야 한다는 데이터가 제시됨. 같은 이유로 존속 연수별 폐업률의 근거치도 창업한 청년들이 2년 이상 지속가능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적 이유로 판단한 목표치임
- (목표) 2030년 청년 창업 건수 : 57,026건  
(목표) 2030년 청년 폐업률 : 전국 평균 하회  
(보조지표 목표) 2030년 청년 창업률 : 전국 평균 상회  
(보조지표 목표) 존속 연수별 폐업률 : 2년 이내 폐업률 50% 이내

## ◆ 용어 정의

### 청년 창업률

- 청년 창업률은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으나, 청년 고용률과 같이 전체 청년 중에서 창업활동을 하는 비중을 의미함
  - 고용률 :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는 사람 비율
  - 창업률 : 사업체를 가지는 사람 비율
- 고용률은 현재 기준 지역의 일자리 양적 수준을 의미하는 반면, 창업률은 창업기업의 성장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일자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2023년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 환경위원회

### 기후자원에너지분과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 자연생태분과

15-4-1 전라북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환경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 총 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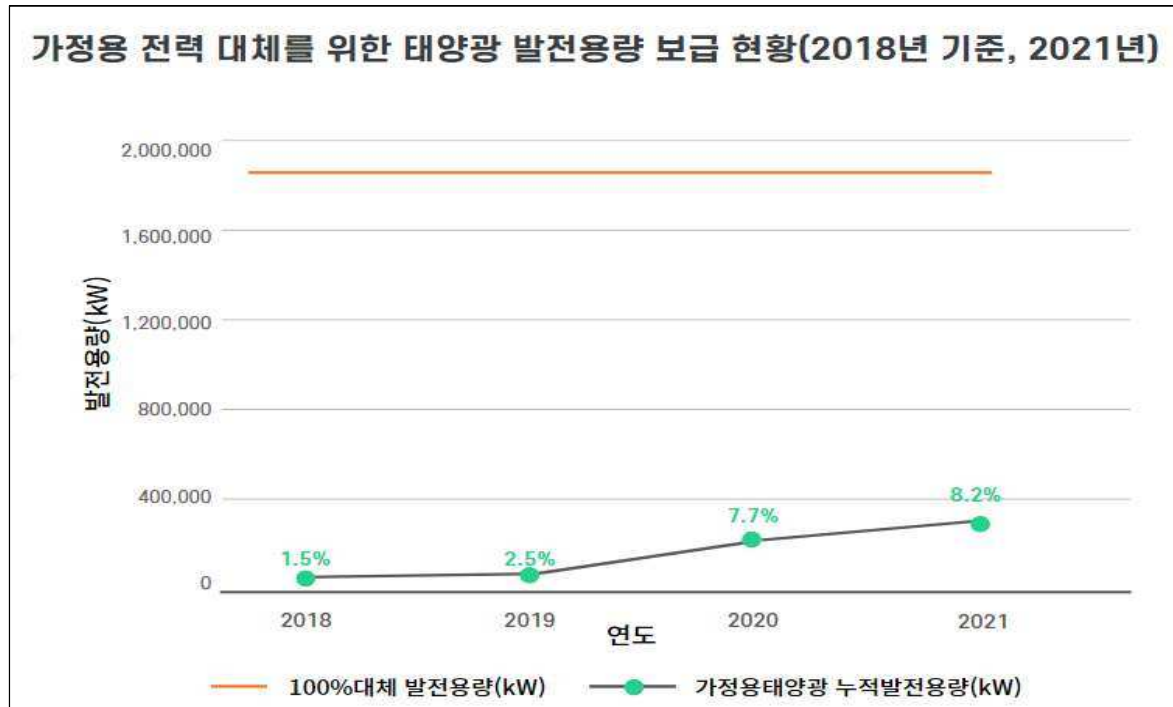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30의 17개 목표(Goals) 중 일곱 번째 목표인 ‘에너지’는 적절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에 관점을 두고 있다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7번째 목표인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도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하고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하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개별 가구의 에너지자립 정도를 파악하여,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시민 역할을 확대에 따라 K-SDGs 7번째 목표인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를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4개의 세부목표와 4개의 지표를 작성하였다
- SDGs 7번 목표 이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부목표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의 지표인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17개의 목표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구성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UN-SDGs   | K-SDGs                       | J-SDGs |  |       |                    |
|-----------|------------------------------|--------|--|-------|--------------------|
|           |                              | 세부목표   |  | 지표    |                    |
| 07<br>에너지 | 07<br>에너지의<br>친환경적<br>생산과 소비 | 7-1    |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br>안정적이고 적절한 접<br>근을 보장한다. | 7-1-1 | 가정용 태양광 누적<br>보급용량 |

〈표 44〉 UN-SDGs 체계 속의 K-SDGs와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세부목표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를 이행하기 위한 지표로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을 알아보았다
- 2021년 가정용 전력사용에 대하여 에너지 자립을 위한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설 보급용량비율은 8.2% 수준이다
- 2020년에 집중적인 보급이 되었으나, 이후 증가율이 낮아진 상태이다



〈그림 34〉 가정용 전력 대체를 위한 태양광 발전용량 보급현황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신규 단독주택 건축시 태양광 설치 의무화 하는 지자체 조례 - 법리검토 필요하고 건물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사업 등 정부 보조금 사업 참여 유도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전라북도 태양광'을 검색하면, “전라북도\_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및 설치현황”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5월 17일 등록되었고, 2023년 11월 6일 수정된, 최근 자료이긴 하나, 엑셀 파일은 10kw 이하 태양광 보급용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 관리부서인 전라북도 미래산업과에 10kw 이하 태양광 보급용량에 관한 원자료(raw data) 및 당해 연도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업해야한다
- 10KW 이하로 주택용 태양광 발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지붕태양광 또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등을 포함하여 도시 및 농촌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대규모로 발전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태양광을 발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3-6KW 지붕 태양광으로 지표 값을 100%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현재 전북이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전체량은 가정 소비량을 넘어서는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잡아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도시와 농촌의 주택 지붕 태양광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 전주 익산 군산 등 도시에서만 여유 전력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확대를 위한 기초지자체 및 시민들의 활동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  |   |          |                                 |
|-----------|--|---|----------|---------------------------------|
| <b>목표</b> |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   |          |                                 |
| 세부목표      |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   |          |                                 |
| 지표명       |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   |          |                                 |
| 필요성 및 의의  | -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개별 가구의 에너지 자립 정도를 파악하여,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시민 역할을 확대 |   |          |                                 |
| 지표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광 발전용량은 주로 한전과의 상계거래 계약을 통해 발전후 사용전기 상계처리 및 잉여전기로 저장하거나 이월사용 가능한 주택용 태양광의 규모를 말함</li> <li>- 해당규모 태양광 용량은 지자체에서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주민 참여방식의 에너지 자립 척도로 활용 가능</li> </ul>               |          |                                 |
|           | 산출 논리 및 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단계값의 누적용량 자료 이용값을 추출하여 연간 누적용량과 보급용량을 산출함</li> <li>- 자료상 보급용량은 신설, 증감설, 해지 등이 반영된 용량이므로 신규 설치용량과 다를 수 있음</li> </ul>  |          |                                 |
|           | 자료원 또는 출처  | 한국에너지관리공단<br>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 산정<br>방법 | 태양광 보급용량 산식<br>=(당해년도-전년도)×누적용량 |
|           | 작성 방법  | 연도별 에너지공단 자료를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원별 발전량, 발전용량, 지역별로 분석, 전라북도 내 가정용 전력소비량, 태양광 발전량 및 발전용량 현황을 검토하여 전년 대비 증감여부를 평가함   |          |                                 |
|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기준 전라북도 태양광 발전량은 4,231GWh, 2014년 대비 9.4배 증가</li> <li>- 전라북도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2,589GWh로, 2014년 대비 1.2배 증가</li> <li>- 도내 태양광 발전용량은 3,692MW로, 2014년 대비 약 8배 증가</li> <li>- 이 중 가정용 태양광 누적 발전용량은 151,651kW임</li> </ul> |          |                                 |

|          |  |                |   |
|----------|--|----------------|---|
|          | - 2017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20년 급격한 설치 이후 증가율이 감소한 상태임   |                |   |
| 기준치      | <b>28,225kW</b><br>(2018년 누적보급용량)<br>2021년 8.2% 달성   | 목표치            | <b>1,850MW</b><br>(2050년까지 2018년 가정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용량) |
| 자료<br>경로 | 누리집: <a href="https://www.knrec.or.kr/">https://www.knrec.or.kr/</a><br>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br>보급통계-세부에너지원별 현황 | 지표<br>관리<br>부서 | 전북도청,<br>에너지수소산업과   |

〈표 45〉 ‘7-1-1 태양광 보급률’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1.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다양한 재생에너지 중에서 주민(도민)들이 직접 설치하여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개별 가구의 에너지 자립 정도를 파악
-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참여형 주택용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주도 에너지 자립과 함께 에너지 복지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
- 가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 시민에 의한 화석연료 대체 및 기후변화 완화의 척도로서 역할이 가능

### (2) 지표의 정의

- 일반적으로 발전전력은 크게 전력 시장을 통한 직접거래 방식(자가용 10kW 초과, 사업용 1kW이상), 한전과의 전력수급계약 체결을 통한 거래(일명 PPA) 방식(자가용 10kW초과~1,000kW이하, 사업용 1,000kW이하), 한전과 상계거래 계약 체결(상계거래, 일반용 태양광)한 거래방식으로 구분됨
-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주로 일반용 태양광 설비이며, 주로 생산된 전력은 판매하는 대신 자가소비 후 한전에 저장되며, 저장된 잉여전력은 전기소비에 따른 요금산정 시 상계되거나 상계 후 나머지는 이월사용이 가능함
- 지표목표 : 도민 1인당 월 평균 전기소비량 108kWh(2018년 기준, 탄소중립 기준년)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발전용량( $1\text{kW}/\text{인} \times 108\text{kWh}/\text{월} \times \text{월}/30\text{일} \times \text{일}/3.6\text{h}$ ) 확보(2050년까지), 총 용량은 대략 1,850MW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 원천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_세부에너지원별 현황」에서 자료확인

#### 나. 자료수집방법

- 해당 자료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간한 통계자료(홈페이지 : <https://www.knrec.or.kr/>)로, 연도별로 지역별, 세부에너지원별, 기초지자체별 현황을 참고할 수 있음

#### (4) 지표산출 방법

##### 가.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 신재생에너지원(27가지,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용량별 누적 보급용량 (kW) 발전시설자료를 사용함

※ 가정용 태양광 누적보급용량 산식  
 = 이전년도 누적보급용량+당해연도 신규보급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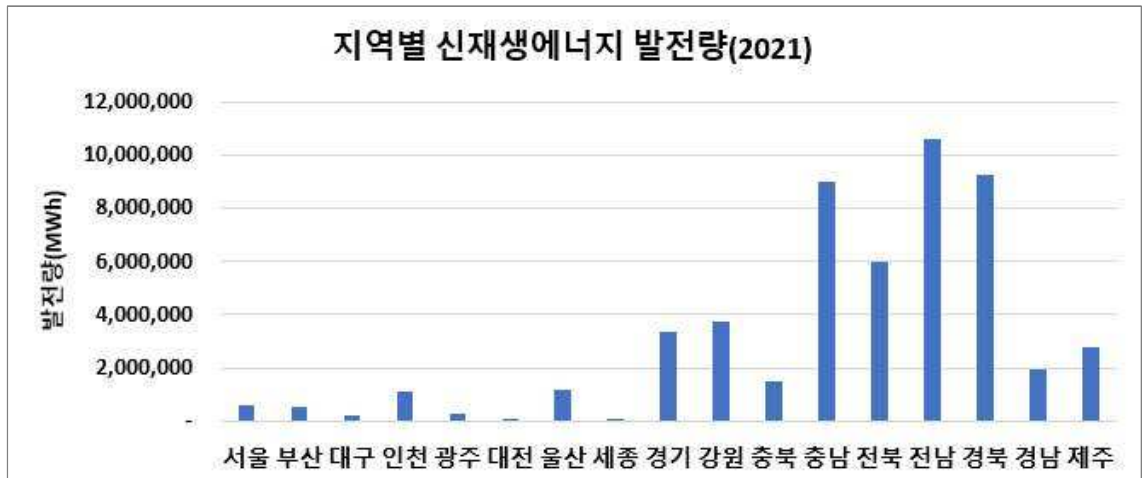
〈표 46〉 태양광 보급용량 산식

## 2. 지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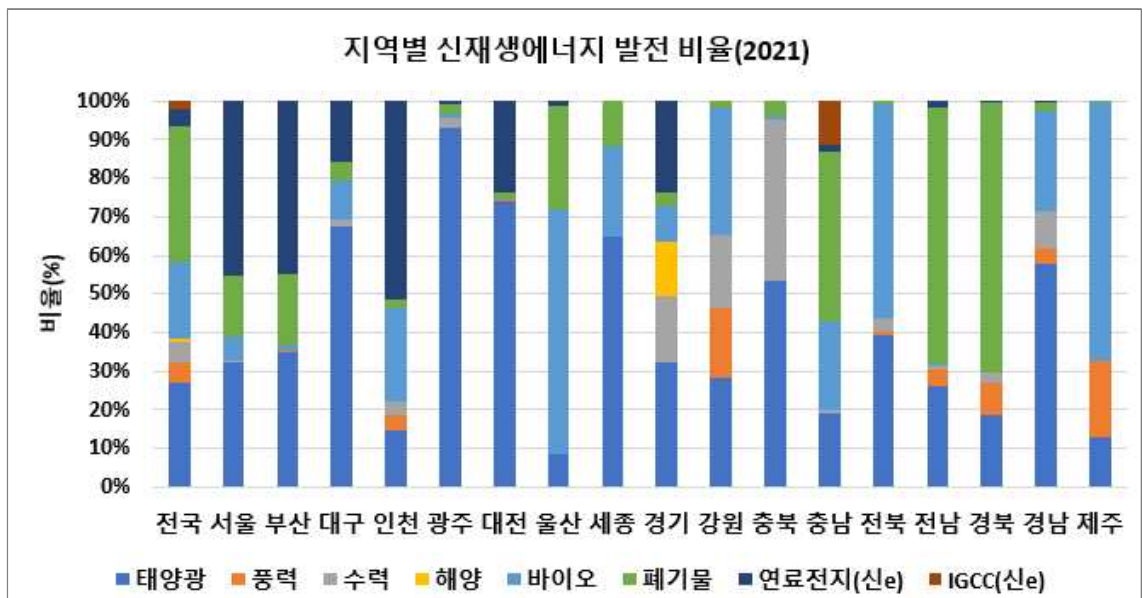
### (1)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수력,해양, 바이오, 폐기물) 과 신에너지(연료전지, IGCC)를 에너지원으로 하며, 2021년 기준 17개 광역별 발전량은 전남>경북>충남>전북>강원>경기>제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에너지원별로 보면, 폐기물 35.2%이 가장 높고, 태양광 27.1%, 바이오 19.9% 순으로 나타나며, 기타 수력 5.3%, 풍력 5.1%, 연료전지 4.4%, IGCC 2.0%, 해양 0.9%으로 발전비율을 구성함.
-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 중심지역은 연료전지가 높고,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경남은 태양광이 우세하며, 울산, 강원, 전북, 제주는 바이오, 충남, 전남, 경북은 폐기물로 생산한 발전이 우세하는 등 지역별로 발전원의 집중도가 차이를 보임.





〈그림 35〉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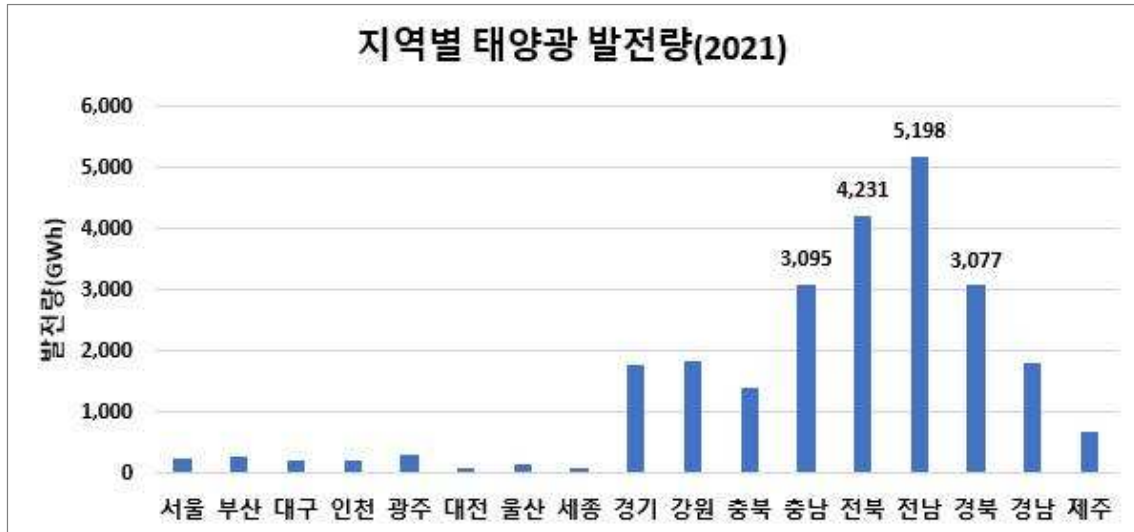


〈그림 36〉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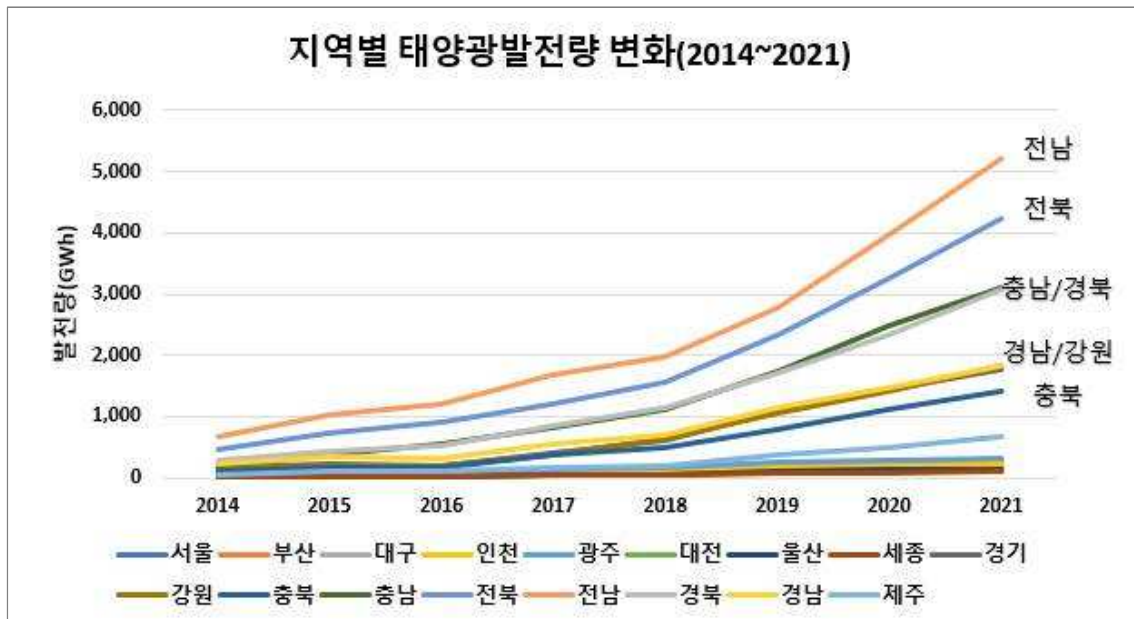
## (2) 지역별 태양광 발전량

- 태양광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전남, 전북, 충남과 경북, 경남과 강원, 충북 순으로 높음

- 전라북도 태양광 발전량은 4,231GWh로, 7년 동안 9.4배 이상 증가하였음
- 태양광 발전시설의 연도별 용량 변화 추이를 보면, 자료 세부 체계가 변경된 2014년 대비 8.5배 이상 증가(2021년)하였으며, 광역별로 보면, 최소 3.3배(부산)에서 최대 13.4배(강원) 정도의 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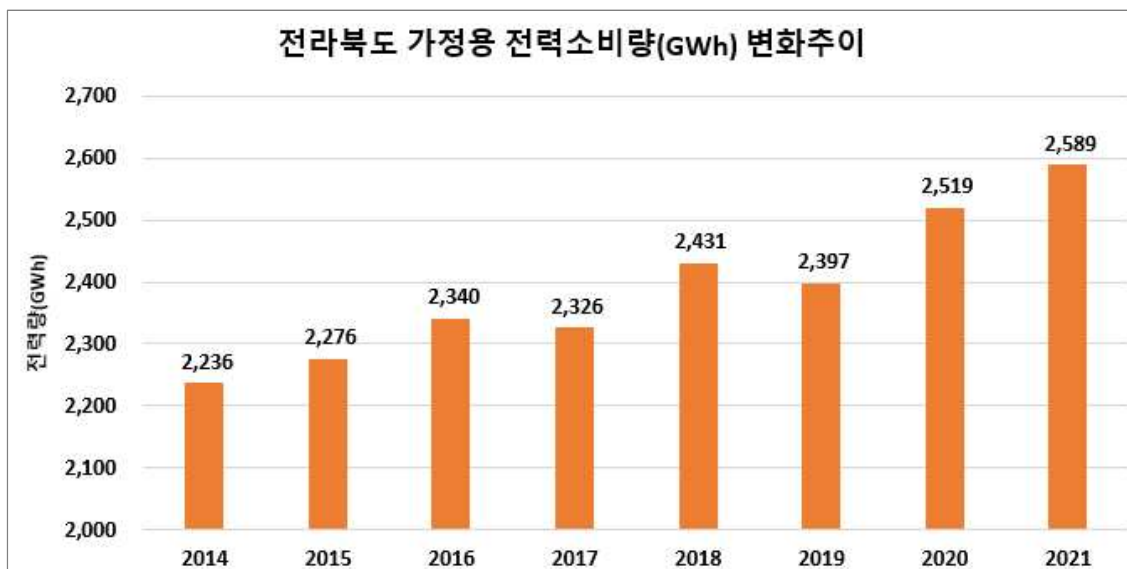
〈그림 37〉 지역별 태양광 발전량(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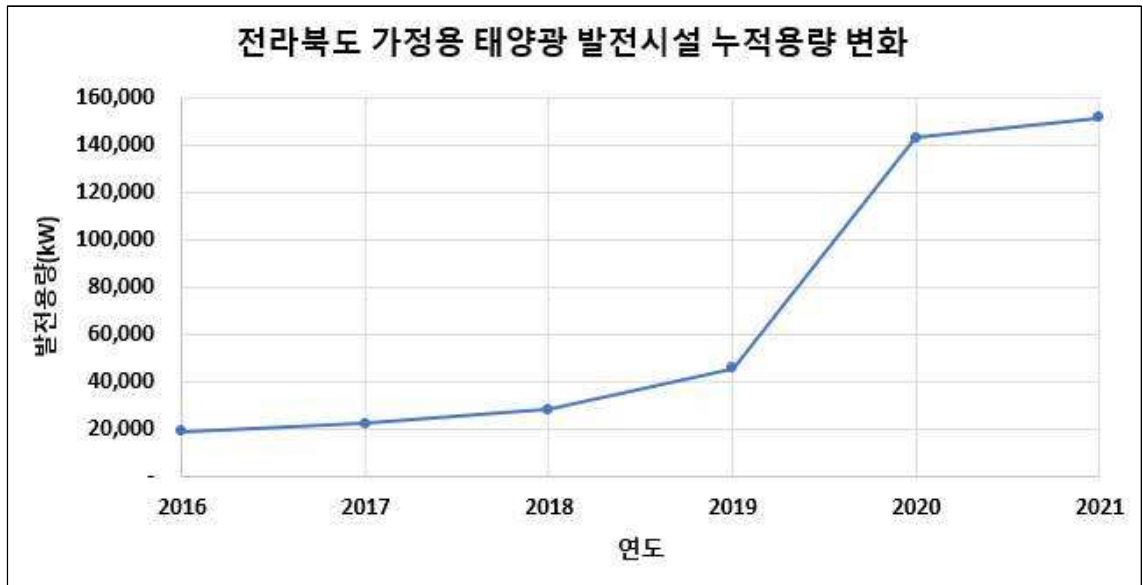
〈그림 38〉 지역별 태양광 발전량 변화(2014~2021)

### (3) 전라북도 전력소비량, 태양광 발전용량 및 변화추이

- 전라북도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2014년 2236GWh에서 2021년 2,589GWh로 약 1.2배 정도 증가하였음
- 도내 태양광 발전용량(누적량 기준)은 2014년 457MW에서 2021년 3,692MW로, 약 8배의 증가율을 보임. 여기서 주로 가정용에서 사용되는 태양광 누적 발전용량은 2019년부터 급증하여 2016년 대비 7.8배 정도 증가율(2021년 기준)을 보였음
- 일명 주택용 태양광(5kw이하)을 비롯한 도내 가정용 태양광 누적 발전용량을 보면 2016년 18.9MW에서 2021년 151.6MW로 최근 5년 동안 7% 이상 증가하였음



〈그림 39〉 전라북도 가정용 전력소비량(GWh) 변화추이



〈그림 40〉 전라북도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누적용량 변화

#### (4) 2050년까지 전라북도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목표

##### ○ 기준치

- 최근 전라북도 가정용 태양광 누적보급용량 2018년을 기준으로 함
- (기준) 2018년 전라북도 태양광 누적보급용량 : 28,225kW

##### ○ 목표치

- 2050년까지 2018년 가정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용량을 목표로 함
- (목표) 약 1,850MW

##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환경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15-4-1. 전라북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 총 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30의 17개 목표(Goals) 중 열다섯 번째 목표인 ‘육상생태계보전’은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에 관점을 두고 있다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5번째 목표인 ‘육상생태계 보전’도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하며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삼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하며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 된 토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불법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하며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 전라북도 생물환경 자원의 미래가치를 인식하고 현황 파악하며 전라북도 멸종위기생물종의 보호, 보전, 증식, 관리하는 목적으로 K-SDGs 15번째 목표인 ‘육상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7개의 세부목표와 10개의 지표를 작성하였다
- SDGs 15번 목표 이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부목표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보호종을 보호한다.’의 지표인 ‘15-4-1 전라북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17개의 목표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구성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UN-SDGs           | K-SDGs            | J-SDGs |  |        |                              |
|-------------------|-------------------|--------|--|--------|------------------------------|
|                   |                   | 세부목표   |  | 지표     |                              |
| 15<br>육상생태계<br>보전 | 15<br>육상생태계<br>보전 | 15-4   | 생물다양성 손실을<br>예방하기 위해<br>법정보호종을<br>보호한다 | 15-4-1 | 전라북도에 서식하는<br>동식물 법정보호종<br>수 |

〈표 47〉 UN-SDGs 체계 속의 K-SDGs와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세부목표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보호종을 보호한다'를 이행하기 위한 지표로 '15-4-1 전라북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을 알아보았다
- 전북지역의 관리나 보전에 대상인 법정보호종에 대한 조사가 미약하고 참고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본 지표를 통하여 전북의 생물다양성에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환경부는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재지정하고 있으며, 282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지정(22.12.9. 기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동식물은 471종이 지정되어 있다. (22.9.2. 기준)
- 도내 산야, 하천 및 새만금에서 멸종위기종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 녹색연합,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등) 혹은 학계의 자료가 잘 반영되도록 연계를 통해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목표       |   | 15. 육상생태계 보전   |  |
|----------|---|--|--|
| 세부목표     |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보호종을 보호한다.  |  |  |
| 지표명      | 15-4-1 전라북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  |  |
| 필요성 및 의의 | 전라북도 생물환경 자원의 미래가치를 인식하고 현황 파악하며, 전라북도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전라북도 멸종위기 생물 종의 보호, 보전, 증식, 관리한다 |  |  |
| 지표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에서 야생 동·식물의 멸종 방지를 위해 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종</li> <li>- 문화재청에서 학술적, 자연사적, 지리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그것이 지닌 희귀성, 고유성, 심미성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종</li> </ul>   |  |
|          | 산출<br>논리 및<br>난점  | 산출 : 환경부 및 문화재청의 법정보호종 수로 함<br>난점 : 환경부나 문화재청의 법정보호종 수는 조사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사 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          | 자료원<br>또는<br>출처   | 전라북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20.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 산정<br>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및 문화재청이 법률로 보호하도록 정한 야생동·식물종 중 도내 서식종</li> <li>- 도내 생물자연 조사 및 보고서 혹은 활동가들의 기록 종</li> </ul> |
|          | 작성<br>방법  | 전라북도 내 서식, 자생하고 있는 법정보호종의 시군별 종수 및 분포  |  |
|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 : 282종(2022.12.9. 기준)<br/> I급 : 포유류(14종), 조류(16종), 어류(11종), 양서파충류(2종), 곤충류(8종), 무척추동물(4종), 육상식물(13종)<br/> II급 : 포유류(6종), 조류(53종), 어류(18종), 양서파충류(6종), 곤충류(21종), 무척추동물(28종), 육상식물(79종)</li> <li>- 전북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2017~2021) : 85종<br/> △포유류 7종 △조류 31종 △양서파충류 6종 △어류 8종<br/> △곤충 8종 △무척추동물 5종 △식물 21종 △고등균류 1종</li> <li>-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16종 II급 71종</li> </ul> |  |

|          |   |                |                                |
|----------|---|----------------|--------------------------------|
|          | - 부안군이 40종 고창군 35종, 군산시 및 정읍시 각각 28종      |                |                                |
| 기준치      | 2020년 기준 85종                              | 목표치            | 2030년까지 87종                    |
| 자료<br>경로 | 국립생태원 요청<br>환경부 및 문화재청 등<br>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 지표<br>관리<br>부서 | 전라북도 생태자원과<br>전북지방환경청<br>자연환경과 |

〈표 48〉 '15-4-1 전라북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1.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가. 전북 내 법정보호종 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

- 지수상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약 1,300만 종의 생물종은 매일 70종씩 사라진다고 함.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이 중에서 양서류가 가장 멸종된 위험이 높다고 함
- '70년 이후 지구상 척추동물의 약 60% 감소, 향후 가속화 전망
-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종풍부도(MSA)는 9% 감소 전망
- 생물종 감소에 따라 유전자 다양성도 더불어 감소 예측,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고유 생물종 멸종,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야생생물 보호관련 여건이 악화되어 있음
- 한반도의 온대성 기후가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육지와 해성에서 동물의 서식지 이동, 습지 축소 등 생태환경 변화로 생물 다양성 감소 전망 됨
-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1차(생물다양성 보전), 2차(생물다양성 보전, 생물자원 활용), 3차(야생생물 서식지, 보호관리 선진화)와 현재“제4차 야생동물 보호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복원, 서식지 보전, 보호·관리 기반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 (22.12 기준) 국가생물종 목록상 자생생물은 58,050종 △척추동물 2,074종, △무척추동물30,867종, △식물5,683종, △균류및지의류6, 116종, △조류 6,493종, △원생동물2,508종, △원핵생물4,309종

### (2) 지표의 정의

-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을 보존,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하고 있음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

정 및 보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35,870종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보호생물 88종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천연기념물  
 471종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에 따른 희귀식  
 물과 특산식물 특별산림보호대상종 53종

※ 환경부

-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은 1989년부터 자연생태계 유지와 야생동·식물의 멸종 방지를 위해 특정 야생동·식물 92종을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이석이 멸종위기 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법정보호종이라 할 수 있음
- 이후 명칭과 종 수가 여러차례 변경되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변경되었고, 2012년 이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재지정하고 있음
- 2022년 12월 9일 개정기준으로 환경부에서 282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음

지정역사



〈그림 41〉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계자료집 2023, 지정역사

연도별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지정 종수의 변화



〈그림 42〉 연도별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지정 종수의 변화

| 분류군    | 1989년 | 1993년 | 1996년 | 1998년 |     | 2005년 |     | 2012년 |     | 2017년 |     | 2022년 |     |
|--------|-------|-------|-------|-------|-----|-------|-----|-------|-----|-------|-----|-------|-----|
|        |       |       |       | I급    | II급 | I급    | II급 | I급    | II급 | I급    | II급 | I급    | II급 |
| 포유류    | -     | -     | -     | 10    | 7   | 12    | 10  | 11    | 9   | 12    | 8   | 14    | 6   |
| 조류     | -     | -     | -     | 13    | 46  | 13    | 48  | 12    | 49  | 14    | 49  | 16    | 53  |
| 양서·파충류 | 12    | 22    | 22    | 1     | 4   | 1     | 5   | 2     | 5   | 2     | 6   | 2     | 6   |
| 어류     | -     | -     | 24    | 5     | 7   | 6     | 12  | 9     | 16  | 11    | 16  | 11    | 18  |
| 곤충류    | 21    | 31    | 31    | 5     | 14  | 5     | 15  | 4     | 18  | 6     | 20  | 8     | 21  |
| 무척추동물  | -     | -     | -     | 3     | 21  | 5     | 24  | 4     | 27  | 4     | 28  | 4     | 28  |
| 육상식물   | 59    | 126   | 126   | 6     | 52  | 8     | 56  | 9     | 68  | 11    | 77  | 13    | 79  |
| 해조류    | -     | -     | -     | -     | -   | 0     | 1   | 0     | 2   | 0     | 2   | 0     | 2   |
| 고등균류   | -     | -     | -     | -     | -   | -     | -   | 0     | 1   | 0     | 1   | 0     | 1   |
| 소계     | 92    | 179   | 203   | 43    | 151 | 50    | 171 | 51    | 195 | 60    | 207 | 68    | 214 |
| 합계     |       |       |       | 194   |     | 221   |     | 246   |     | 267   |     | 282   |     |

〈그림 43〉 연도별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지정 종수의 변화(분류군별)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 수집 방법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전북권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최종보고서 참고

### (4) 지표산출 방법

#### 가. 전라북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 현재 전북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후 발견되는 종은 매우 희귀할 것으로 사료됨.
- 만경강에 서식하는 황새 등 법정보호종에 추가될 가능성은 높으나 타 몇종들의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 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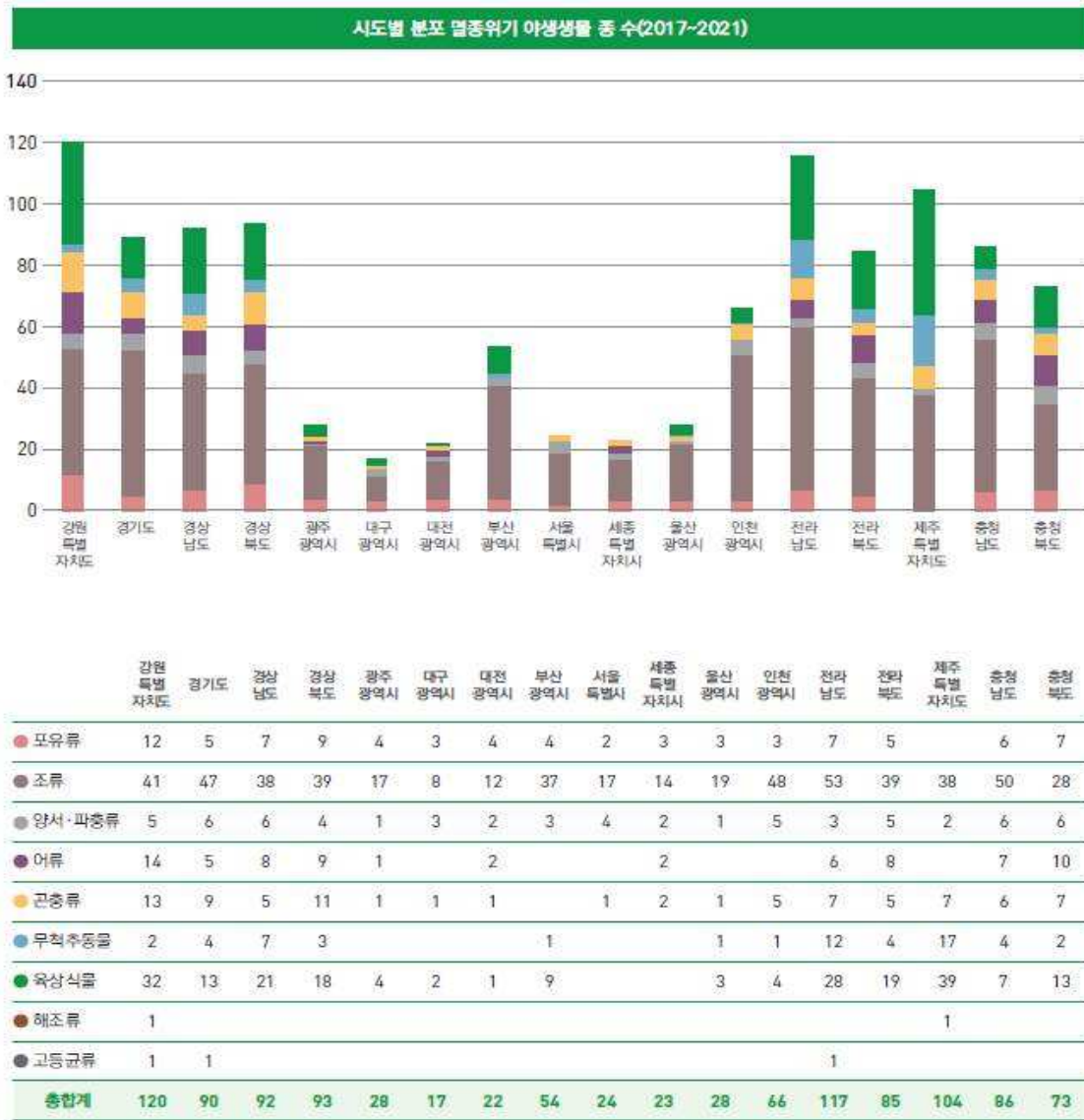
## 2. 지표 분석 결과

### (1) 전국 시도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 (2017~2021)

-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멸종위기야생생물 통계자료집에 의거
- 가장 많은 종수는 강원도(120종), 전라남도(117종), 제주도(104종) 순 전라북도는 85종임



〈그림 49〉 전국 시도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2017~2021)



〈그림 45〉 시도별 분포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수(2017~2021)

## (2) 전북지역 여건

- 전북권의 면적 8,069km<sup>2</sup>으로 남한 면적 대비 약8%를 차지함
- 지역 여건은 전북지방환경청 관할로 전라북도는 6개시, 8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은 4개(변산반도, 내장산, 지리산, 덕유산)가 포함됨

- 100m 이하 평지가 전체 면적의 51%, 100~500m 산지 약 33%, 500m 이상이 16%로 평야지대가 많음
- 전북권의 도서는 102개(유인도 25개, 무인도 77개), 해안선은 577.1km

#### □ 야생동·식물 현황

- 2002년부터 2019년까지 8개 분류군 87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전북권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2006~2008, 2010~2013) 50종 1,483지점
-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2014~2019) 49종 66지점
-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2002~2004, 2009, 2013) 29종 160지점
- △포유류7종, △조류31종, △양서파충류6종, △어류8종, △곤충8종, △무척추동물5종, △식물21종, △고등균류1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16종, II급은 71종 확인
- 지자체별 부안군이 40종으로 가장 많고, 고창군 35종, 군산시와 정읍시가 각각 28종 확인됨
- 포유류 총 7종(담비, 무산쇠족제비, 물범, 반달가슴곰, 삿, 수달, 하늘다람쥐)
- 조류는 총 31종(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매, 물수리, 벌매,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새매, 새호리기, 솔개,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양비둘기, 올빼미, 잣빛개구리매, 저어새, 조롱이, 참매, 참수리, 큰고니, 큰기러기, 큰말뚝가리, 팔색조, 흰목, 물떼새)
- 어류 총 8종(감돌고기, 다묵장어, 돌상어, 모래주사, 부안종개, 임실납자루, 큰줄납자루, 통사리)
- 양서 파충류 총 6종(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수원청개구리, 표범장지뱀)
- 무척추동물 총 5종(귀이빨대칭이, 대추귀고동, 두드럭조개, 염주알다슬기, 흰발농게)
- 곤충 총 8종(꼬마잠자리, 닳무늬길앞잡이, 대모 잠자리, 물방개, 물장군, 비단벌레, 수염풍뎅이, 참호박뒤영벌)

- 식물 총 21종(가시연, 가시오갈피나무, 각시수련, 광릉요강꽃, 구름병아리난초, 날개 하늘나리, 노랑붓꽃, 대홍란, 독미나리, 매화마름, 물고사리, 백양더부살이, 백운란, 복주머니란, 석곡, 세뿔투구꽃, 솔붓꽃, 순채, 으름난초, 전주물꼬리풀, 진노랑상사화)
- 균류 1종 (화경버섯)

□ 전북 내 지표 현황

-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8개 분류군 87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전북권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 포유류 7종, 조류 31종, 양서·파충류 6종, 어류 8종, 곤충 8종, 무척추동물 5종, 식물 21종, 고등균류 1종 등으로 확인

\*전국자연환경조사(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분포조사(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 자연자원모니터링(국립공원) 자료

| 구 분 | 종 수 |     |      | 지점 수  |     |       |
|-----|-----|-----|------|-------|-----|-------|
|     | 합계  | I 급 | II 급 | 합계    | I 급 | II 급  |
| 전체  | 87  | 16  | 71   | 2,307 | 640 | 1,667 |
| 고창군 | 35  | 4   | 31   | 177   | 12  | 165   |
| 군산시 | 28  | 6   | 22   | 146   | 28  | 118   |
| 김제시 | 23  | 4   | 19   | 98    | 19  | 79    |
| 남원시 | 24  | 5   | 19   | 265   | 82  | 183   |
| 무주군 | 15  | 4   | 11   | 121   | 49  | 72    |
| 부안군 | 40  | 6   | 34   | 313   | 42  | 271   |
| 순창군 | 20  | 5   | 15   | 149   | 69  | 80    |
| 완주군 | 18  | 3   | 15   | 159   | 57  | 102   |
| 익산시 | 15  | 3   | 12   | 53    | 10  | 43    |
| 임실군 | 18  | 4   | 14   | 273   | 96  | 177   |
| 장수군 | 19  | 3   | 16   | 140   | 38  | 102   |
| 전주시 | 16  | 4   | 12   | 41    | 16  | 25    |
| 정읍시 | 28  | 5   | 23   | 162   | 44  | 118   |
| 진안군 | 25  | 5   | 20   | 210   | 78  | 132   |

<표 50> 전북권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자체별 종 수와 분포 지점 수

| 구분  | 종수 | 종 목록                               |  |
|-----|----|------------------------------------|--|
|     |    | I급                                 | II급  |
| 고창군 | 34 | 노랑부리백로, 매, 비단벌레, 수달                | 가시연,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구렁이, 노랑부리저어새, 다목장어, 닳무늬갈아잡이, 대추귀고동, 매화마름, 멧꿩이, 물방개, 물수리, 백양더부살이, 벌매,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샛, 새매, 새호리기, 석곡, 수리부엉이, 알락꼬리마도요, 염주알다슬기, 진노랑상사화,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말뚝가리, 흰목물떼새, 흰발농게                |
| 군산시 | 28 | 귀이빨대창이, 노랑부리백로, 매, 수달, 수원청개구리, 저어새 | 가시연, 각시수련,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대모잠자리, 독미나리, 멧꿩이, 물고기, 물범,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샛, 매새, 새호리기,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큰고니, 큰기러기, 큰말뚝가리, 표범장지뱀   |
| 김제시 | 21 |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 가시연, 검은머리물떼새, 구렁이, 금개구리, 노랑부리저어새, 담비, 대모잠자리, 멧꿩이, 물고사리, 붉은배새매, 샛, 새매, 새호리기, 수리부엉이, 순채, 조롱이, 큰고니, 큰기러기, 흰목물떼새   |
| 남원시 | 24 | 감돌고기, 노랑부리백로, 모래주사, 수달, 임실납자루      | 꼬마잠자리, 가시연, 다목장어, 담비, 돌상어, 무산쇠족제비, 복주머니란, 붉은배새매, 샛, 새매, 새호리기, 세뿔투구꽃, 솔밭꽃, 수리부엉이, 올빼미, 참매, 큰말뚝가리, 하늘다람쥐, 흰목물떼새  |
| 무주군 | 15 | 감돌고기, 광릉요강꽃, 반달가슴곰, 수달             | 가시오갈피나무, 구렁이, 날개하늘나리, 담비, 돌상어, 복주머니란, 붉은배새매, 샛, 양비둘기, 조롱이, 흰목물떼새   |
| 부안군 | 40 | 귀이빨대창이, 노랑부리백로, 매, 비단벌레, 수달, 저어새   | 가시연,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구렁이, 금개구리, 까막딱다구리, 남생이, 노랑부리저어새, 노랑뽕꽃, 대추귀고동, 매화마름, 멧꿩이, 물고사리, 물방개, 물수리, 물장군, 부안종개,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샛, 새매, 새호리기, 석곡, 솔개, 수리부엉이, 알락꼬리마도요, 젓빛개구리매, 조롱이,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화경버섯, 흰목물떼새, 흰발농게 |



|     |    |                            |  |
|-----|----|----------------------------|--|
| 순창군 | 20 | 두드럭조개, 매, 모래주사, 수달, 임실납자루  | 구렁이, 다묵장어, 담비, 대흥란, 백운란, 붉은배새매, 샓, 새매, 새호리기, 수리부엉이, 잣빛개구리매, 조롱이, 진노랑상사화, 큰줄납자루, 흰목물떼새  |
| 완주군 | 18 | 감돌고기, 수달, 통사리              | 가시연, 구렁이,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다묵장어, 담비, 붉은배새매, 샓, 새매, 새호리기, 조롱이, 참매, 큰고니, 흰목물떼새  |
| 익산시 | 15 | 수달, 수염퐁딩이, 수원청개구리          | 가시연, 금개구리, 맹꽂이, 물고사리, 붉은배새매, 샓, 새매, 새호리기, 수리부엉이, 잣빛개구리매, 큰기러기, 큰말뚝가리   |
| 임실군 | 18 | 모래주사, 수달, 임실납자루, 참수리       | 가시연, 다묵장어, 담비, 물방개, 붉은배새매, 샓, 새매, 새호리기, 솔밭꽃, 조롱이, 참매, 큰말뚝가리, 큰줄납자루, 흰목물떼새  |
| 장수군 | 19 | 감돌고기, 매, 수달                | 구름병아리난초, 남생이, 다묵장어, 담비, 복주머니란, 붉은배새매, 샓, 새매, 새호리기, 세뿔투구꽃, 솔밭꽃, 올빼미, 조롱이, 참매, 하늘다람쥐, 흰목물떼새  |
| 전주시 | 16 | 감돌고기, 수달, 수원청개구리, 통사리      | 가시연, 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노랑부리저어새, 붉은배새매, 샓, 새매, 새호리기, 잣빛개구리매, 전주물꼬리풀, 흰목물떼새  |
| 정읍시 | 28 | 귀이빨대칭이, 매, 수달, 임실납자루, 참수리  | 가시연, 노랑부리저어새, 노랑붓꽃, 다묵장어, 담비, 대흥란, 독수리, 맹꽂이, 물고사리, 백앙더부살이, 붉은배새매, 샓, 새매, 새호리기, 염주알다슬기, 조롱이, 진노랑상사화, 참호박뒤영벌, 큰기러기, 큰말뚝가리, 큰줄납자루, 팔색조, 흰목물떼새 |
| 진안군 | 24 | 감돌고기, 모래주사, 수달, 임실납자루, 통사리 |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꼬마잠자리, 다묵장어, 담비, 돌상어, 물수리, 벌매, 붉은배새매, 샓, 새매, 새호리기, 솔밭꽃,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으름난초, 조롱이, 참매, 큰말뚝가리, 흰목물떼새                         |

〈표 51〉 전북권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자체별 종 목록

## (2) 2030년까지 전라북도 법정보호종 목표

### ○ 기준치

-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 : 282종(2022.12.9. 기준)
  - I급 : 포유류(14종), 조류(16종), 어류(11종), 양서파충류(2종)곤충류(8종), 무척추동물(4종), 육상식물(13종)
  - II급 : 포유류(6종), 조류(53종), 어류(18종), 양서파충류(6종), 곤충류(21종), 무척추동물(28종), 육상식물(79종)
- 전북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2017~2021) : 85종
  - △포유류 7종 △조류 31종 △양서파충류 6종 △어류 8종 △곤충 8종 △무척추동물 5종 △식물 21종 △고등균류 1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16종 II급 71종
- 부안군이 40종 고창군 35종, 군산시 및 정읍시 각각 28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시도별 분포 현황으로 가장 많은 지역 순은 강원도(120종), 전라남도(117종), 제주도(104종), 경상북도(93종), 경상남도(92종), 경기도(90종), 충청남도(86종), 전라북도(85종)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67종(I급 60종, II급 207종)을 지정·관리
  - : 포유류는 총 7종(담비, 무산쇠족제비, 물범, 반달가슴곰, 삿, 수달, 하늘다람쥐)
  - : 조류는 총 31종(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매, 물수리, 벌매,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새매, 새호리기, 솔개,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마도요, 양비둘기, 올빼미, 잣빛개구리매, 저어새, 조롱이,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말뚝가리, 팔색조, 흰목물떼새)
  - : 어류는 총 8종(감돌고기, 다목장어, 돌상어, 무래주사, 부안종개, 임실납자루, 큰줄납자루, 통사리)
  - : 양서·파충류는 총 6종(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수원청개구리, 표범장기뱀)
  - : 무척추동물은 총 5종(귀이빨대칭이, 대추귀고동, 두드럭조개, 염주알다슬기, 흰발농개)
  - : 곤충류는 총 8종(꼬마잠자리, 닳무늬길앞잡이, 대모잠자리, 물방개, 물장군, 비단벌레,

수염풍뎅이, 참호박뒤영벌)

: 야생식물은 총 21종(광릉요강꽃, 암매, 가시연, 각시수련, 날개하늘리, 노랑붓꽃, 대흥란, 독미나리, 매화마름, 물고사리, 백양더부살이, 백운란, 복주머니란, 석곡, 세불투구꽃, 솔붓꽃, 순채, 으름난초, 전주물꼬리풀, 제주고사리삼, 지네발란, 진로랑상사화)

### ○ 목표치

-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수에 대한 가감이 진행되고 있음.
-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변화로 인한 야생생물의 보전 및 관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멸종위기의 생물들은 늘어나는 추세임.
- 전라북도라는 생태계 환경에서 존재하는 보호종의 보호 및 보전이 중요하고, 또 다른 보호종을 발견해 가는 것도 중요함.
- 현재 전라북도 법정보호종 85종을 잘 보전하고 환경부,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동·식물계에 각각 1종씩 혹은 그 이상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목표) 전라북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 87종

◆ 용어 정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I급) 혹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 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II급)

천연기념물

- 학술적, 자연사적, 지리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그것이 지닌 희귀성, 고유성, 심미성으로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정 문화재

법정보호종

-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등을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 보호하는 생물



## V. 함께한 사람들

2020

• J-SDGs 총괄워크숍



• J-SDGs 기획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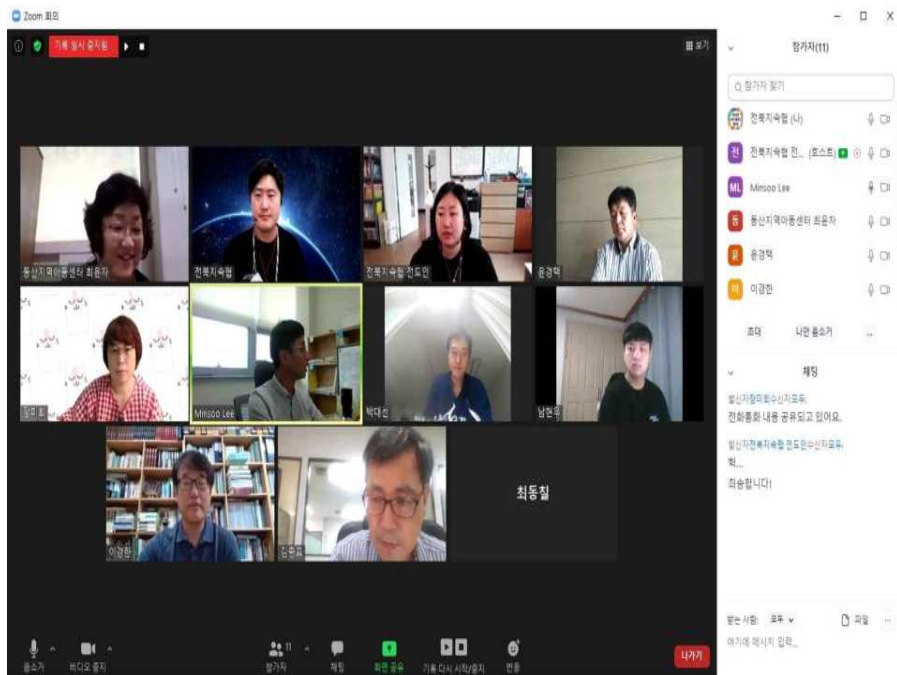


• J-SDGs 수립 및 지표 개발 연구 용역





• 사람위원회







• 경제위원회







• 환경위원회





2021

• J-SDGs 기획단



• 사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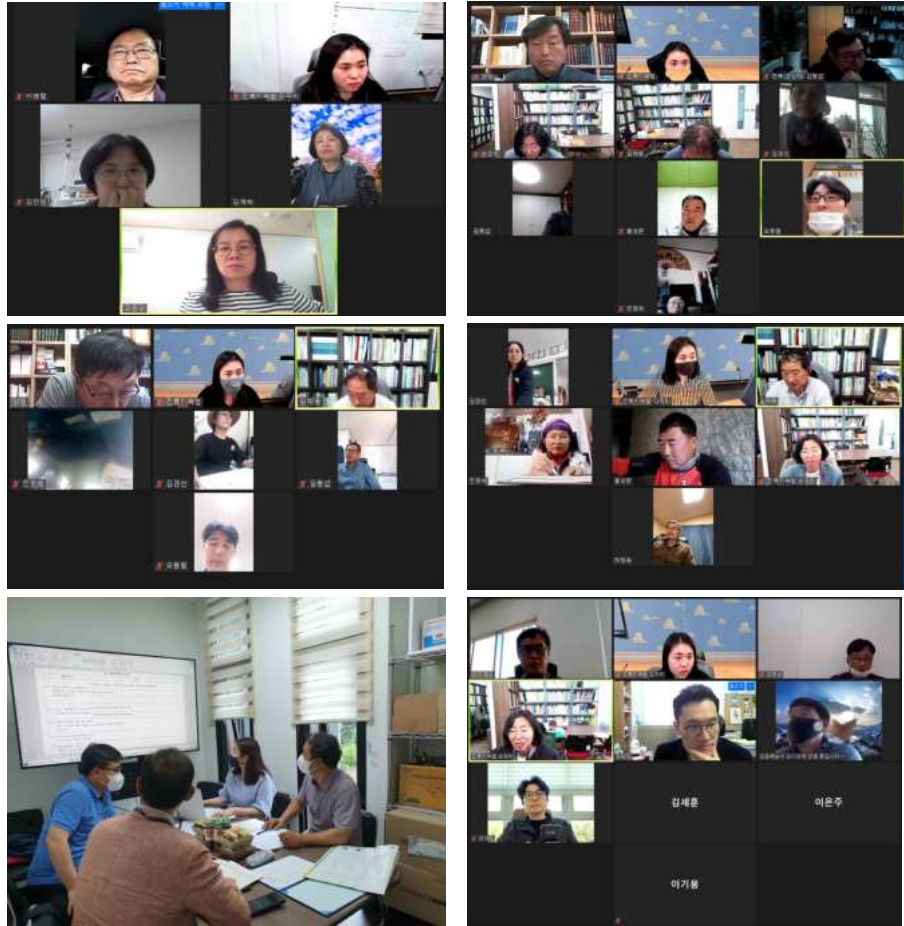
• 경제위원회





• 환경위원회





• J-SDGs 위원장단 회의



# 2022

• J-SDGs 기획단 및 위원장단



• J-SDGs 추진위원 통합워크숍



- 사람위원회



- 경제위원회 정기회의



• 환경위원회 정기회의



• J-SDGs 총괄워크숍











2023

• J-SDGs 정책위원회



• 사람위원회







• 경제위원회







• 환경위원회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1. 대표단

|   | 이름  | 직책 |      | 소속            |
|---|-----|----|------|---------------|
| 1 | 유혜숙 | 시민 | 상임대표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2 | 임상규 | 행정 | 공동대표 |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 3 | 김홍식 | 기업 | 공동대표 | 전북도시가스(주)     |

## 2. 고문단

|   | 이름  | 직책   | 소속               |
|---|-----|------|------------------|
| 1 | 최인규 | 전임대표 | (사)전북노동복지센터      |
| 2 | 김보금 | 전임대표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
| 3 | 김택천 | 전임대표 | 지방분권전북회의 상임대표    |

## 3. 운영위원회

|    | 이름  | 직책           | 소속            |
|----|-----|--------------|---------------|
| 1  | 오창환 | 운영위원장/전문가    | 전북대학교         |
| 2  | 이병렬 | 부위원장/전문가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
| 3  | 이성호 | 행정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
| 4  | 이명연 | 의회           | 전라북도의회        |
| 5  | 이병철 | 의회           | 전라북도의회        |
| 6  | 최현규 | 자연생태분과 위원장   | 전주정원문화센터      |
| 7  | 문지현 | 자연생태분과 부위원장  | 전북환경운동연합      |
| 8  | 오광진 | 농업농촌분과 위원장   | 전라북도농어촌지원센터   |
| 9  | 주영식 | 농업농촌분과 부위원장  | 아람            |
| 10 | 현영삼 | 아동청소년분과 위원장  |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11 | 최윤자 | 아동청소년분과 부위원장 | 전주동산지역아동센터    |
| 12 | 박명용 | 자원에너지분과 위원장  | 한국건설자원협회 전북지회 |
| 13 | 장남정 | 자원에너지분과 부위원장 | 전북연구원         |
| 14 | 김택천 | 기후변화협의회      | (사)전북강살리기추진단  |
| 15 | 강소영 | 대외협력위원회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16 | 김진태 | 전문가          | 탄소중립전북행동      |
| 17 | 김상진 | 전문가          | 전주대학교         |
| 18 | 한동승 | 전문가          | 전주대학교         |
| 19 | 오문태 | 유관기관         | (사)전북강살리기추진단  |
| 20 | 임은순 | 유관기관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 21 | 김보국 | 유관기관         | 전북연구원         |
| 22 | 권영동 | 사무처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4. 감사

|   | 이름   | 직책   | 소속        |
|---|------|------|-----------|
| 1 | 국주영은 | 사업감사 | 전라북도의회    |
| 2 | 박전숙  | 회계감사 | 세무사박전숙사무소 |

#### 5. J-SDGs 정책위원회

|   | 이름  | 직책        | 소속            |
|---|-----|-----------|---------------|
| 1 | 이경한 | 정책단장      |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
| 2 | 김진태 | 경제위원회 위원장 | 탄소중립전북행동 상임대표 |
| 3 | 김상진 | 환경위원회 위원장 | 전주대학교 교수      |
| 4 | 오창환 | 전문가       | 전북대학교 교수      |
| 5 | 한동송 | 전문가       | 전주대학교 교수      |
| 6 | 주영식 | 전문가       | 아람            |

#### 6. J-SDGs 총괄위원회

##### □ 사람위원회

##### ○ 사회복지분과 (SDGs 1, 3)

|    | 이름  | 직책  | 소속                 |
|----|-----|-----|--------------------|
| 1  | 현영삼 | 위원장 |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2  | 박대선 | 위 원 | 청년식탁 사잇길           |
| 3  | 홍성운 | 위 원 | 김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준)    |
| 4  | 정호영 | 위 원 |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관장     |
| 5  | 유원호 | 위 원 | 전주대학교              |
| 6  | 최윤자 | 위 원 | 전주동산지역아동센터 센터장     |
| 7  | 김의숙 | 위 원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
| 8  | 최현숙 | 위 원 | 전주시수어통역센터 실장       |
| 9  | 이소임 | 위 원 |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팀원    |
| 10 | 정종성 | 위 원 | 장수보건복지센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 11 | 백인출 | 위 원 | 전북그린리더협의회장         |
| 12 | 이동훈 | 위 원 | (사)아름다운배움          |
| 13 | 백영규 | 위 원 | 광역자활센터장            |
| 14 | 안예원 | 위 원 | 전주대학교              |

○ 농업농촌분과 (SDGs 2)

|   | 이름  | 직책  | 소속                         |
|---|-----|-----|----------------------------|
| 1 | 오광진 | 위원장 | 전라북도농어촌지원센터                |
| 2 | 최성재 | 위원  | 농촌디자인(주) 대표                |
| 3 | 문요한 | 위원  | 협동조합 이장 이사                 |
| 4 | 홍성문 | 위원  | 고창지속협 대표                   |
| 5 | 조성근 | 위원  | 전북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
| 6 | 송창훈 | 위원  | 순창군농업기술센터                  |
| 7 | 박연미 | 위원  | 이레농원                       |
| 8 | 이경철 | 위원  | 한국농수산대학                    |
| 9 | 최명희 | 위원  | 전북대학교 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 산학협력 교수 |

○ 교육성평등분과 (SDGs 4, 5)

|   | 이름  | 직책  | 소속               |
|---|-----|-----|------------------|
| 1 | 김종표 | 위원장 | 전북일보 논설위원        |
| 2 | 김일수 | 위원  | 고창지속협 운영위원장      |
| 3 | 남현우 | 위원  |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4 | 김춘학 | 위원  | 다이룸종합교육지원센터 센터장  |
| 5 | 박종관 | 위원  | 문화나들이콘텐츠연구소 대표   |
| 6 | 이경한 | 위원  |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
| 7 | 장미희 | 위원  | 교육콘텐츠연구소 이룸      |
| 8 | 박찬희 | 위원  |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 9 | 전진  | 위원  |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

□ 경제위원회

|   | 이름   | 직책  | 소속                 |
|---|------|-----|--------------------|
| 1 | 김진태  | 위원장 | 탄소중립전북행동 상임대표      |
| 2 | 국주영은 | 위원  | 전북도의회 의장           |
| 3 | 김보금  | 위원  |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
| 4 | 김시백  | 위원  | 전북연구원 부장(연구위원)     |
| 5 | 권순표  | 위원  | (유)사각사각 대표         |
| 6 | 정명운  | 위원  | 푸른도시협의회 대표         |
| 7 | 박명용  | 위원  | 한국건설자원협회 전북지회 사무국장 |

|    |     |     |                    |
|----|-----|-----|--------------------|
| 8  | 백승만 | 위 원 |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
| 9  | 유대근 | 위 원 | 우석대학교 명예교수         |
| 10 | 이수영 | 위 원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팀장      |
| 11 | 전안균 | 위 원 |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 12 | 조지훈 | 위 원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前)  |
| 13 | 주영식 | 위 원 | 도서출판 아람 대표         |
| 14 | 채준호 | 위 원 | 전북대학교 전임교수         |

□ 환경위원회

○ 기후·자원에너지분과

|    | 이름  | 직책  | 소속                        |
|----|-----|-----|---------------------------|
| 1  | 김세훈 | 위원장 | MNS지속가능연구소 대표이사           |
| 2  | 김택천 | 위 원 | 지방분권전북회의 상임대표             |
| 3  | 고영삼 | 위 원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             |
| 4  | 고은경 | 위 원 | ECOgreen환경교육연구소           |
| 5  | 권태훈 | 위 원 |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팀 부장 |
| 6  | 김상진 | 위 원 |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 7  | 김인순 | 위 원 | 공간문화로 대표                  |
| 8  | 김종주 | 위 원 | (사)전북수산업연합회장              |
| 9  | 노경만 | 위 원 | (주)로만건설 대표이사              |
| 10 | 박영기 | 위 원 | 전북대학교 교학부총장(토목공학과 교수)     |
| 11 | 오창환 | 위 원 |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
| 12 | 이기언 | 위 원 | 국회 정무보좌관 / 토지정의기본소득연구소    |
| 13 | 이기용 | 위 원 | (주)신광에너지                  |
| 14 | 이명주 | 위 원 | 되살림공유연구소 소장               |
| 15 | 이병렬 | 위 원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
| 16 | 이상혁 | 위 원 |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
| 17 | 장남정 | 위 원 |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18 | 장진호 | 위 원 |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               |
| 19 | 최영규 | 위 원 |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 사무총장         |
| 20 | 최정은 | 위 원 | 전북대학교 빅데이터비즈니스연구소         |
| 21 | 한동승 | 위 원 | 전주대학교 교수                  |

○ 자연생태분과

|    | 이름  | 직책  | 소속             |
|----|-----|-----|----------------|
| 1  | 임채웅 | 위원장 |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
| 2  | 권용훈 | 위원  | 해강생태연구소 소장     |
| 3  | 김종만 | 위원  |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원장 |
| 4  | 김형섭 | 위원  | 군산대학교 교수       |
| 5  | 문지현 | 위원  |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 6  | 박성례 | 위원  | 푸른도시협의회        |
| 7  | 박정희 | 위원  | 푸른꿈고등학교 교장     |
| 8  | 양헌  | 위원  | 생물다양성연구소       |
| 9  | 오동필 | 위원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
| 10 | 오문태 | 위원  |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
| 11 | 오흥근 | 위원  |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
| 12 | 유주리 | 위원  | 산림복지교육센터we-숲   |
| 13 | 유지은 | 위원  | 전북생명의숲 사무국장    |
| 14 | 최현규 | 위원  | 전주생태하천협의회      |
| 15 | 하정옥 | 위원  | 애벌레공작소 대표      |

7. 실행위원회

1) 전북 시·군 협의회

|   | 이름  | 직책  | 소속              |
|---|-----|-----|-----------------|
| 1 | 강소영 | 위원장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2 | 김재덕 | 위원  |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3 | 김양우 | 위원  |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4 | 정남수 | 위원  | 군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5 | 김경선 | 위원  | 장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6 | 박찬희 | 위원  |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7 | 홍성운 | 위원  | 김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준) |
| 8 | 엄성복 | 위원  | 완주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준) |
| 9 | 홍성문 | 위원  | 고창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준) |

## 2) 기후환경위원회

|    | 이름  | 직책   | 소속            |
|----|-----|------|---------------|
| 1  | 백인출 | 위원장  | 정읍시그린리더협의회    |
| 2  | 박성례 | 부위원장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3  | 김공순 | 위원   | 김제시그린리더협의회    |
| 4  | 김준희 | 위원   | 전주기후환경네트워크    |
| 5  | 라영  | 위원   | 전라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  |
| 6  | 윤경배 | 위원   | 임실기후환경네트워크    |
| 7  | 이고은 | 위원   | 고창기후환경네트워크    |
| 8  | 이민경 | 위원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9  | 이은숙 | 위원   | 익산환경운동연합      |
| 10 | 이현세 | 위원   | 전주시에너지센터      |
| 11 | 이현주 | 위원   | 장수 컨설턴트       |

## 3) ESD위원회

|   | 이름    | 직책 | 소속           |
|---|-------|----|--------------|
| 1 | 이재은   | 위원 | 전북환경교육센터     |
| 2 | 강소영   | 위원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3 | 김민정   | 위원 | 전라북도기후변화교육센터 |
| 4 | 모아름드리 | 위원 | 프리데코         |
| 5 | 최진호   | 위원 |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  |
| 6 | 문지현   | 위원 | 전북환경운동연합     |
| 7 | 안성균   | 위원 | 야호통합교육지원센터   |
| 8 | 최우순   | 위원 | 전주시에너지센터     |
| 9 | 박찬희   | 위원 |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8. 전북지속협 위원

|   | 이름  | 직책 | 소속            |
|---|-----|----|---------------|
| 1 | 김은정 | 위원 | 아동청소년분과 위원    |
| 2 | 강재원 | 위원 | (주)사람과환경      |
| 3 | 고영조 | 위원 | 새만금도민회의       |
| 4 | 김도현 | 위원 | 강살리기 익산네트워크   |
| 5 | 김상래 | 위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    |      |     |                    |
|----|------|-----|--------------------|
| 6  | 김상욱  | 위 원 |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
| 7  | 김석균  | 위 원 | 흙건축연구소             |
| 8  | 김수린  | 위 원 | 김제기후환경네트워크         |
| 9  | 김정흠  | 위 원 | 임실군의회 의원           |
| 10 | 김중기  | 위 원 | 전북대학교              |
| 11 | 박난희  | 위 원 | 김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12 | 박종석  | 위 원 | 전)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센터장 |
| 13 | 서문산성 | 위 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 14 | 유혜영  | 위 원 |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장    |
| 15 | 이병도  | 위 원 | 전라북도의회             |
| 16 | 이병재  | 위 원 | 전라일보사              |
| 17 | 장태일  | 위 원 | 전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
| 18 | 채연주  | 위 원 |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

#### 9.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

|   | 이 름 | 직 책  | 소 속           |
|---|-----|------|---------------|
| 1 | 권영동 | 사무처장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2 | 이성중 | 부장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3 | 홍성률 | 부장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4 | 김주리 | 팀장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5 | 김하나 | 팀장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6 | 박성희 | 팀장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7 | 김현우 | 간사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8 | 김예솔 | 간사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뒷 표지]**

발행처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소 : 5490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89

홈페이지 : [www.jbcds.org](http://www.jbcds.org)

전화 : 063-232-3543

팩스 : 063-288-3543

이메일 : [jbcds@daum.net](mailto:jbcds@daum.net)